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석사학위논문

한국 ODA 정책에 대한 인식유형 탐구

- Q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이시영

한국 ODA 정책에 대한 인식유형 탐구

- Q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

지도교수 정 광 호

이 논문을 정책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이 시 영

이시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8월

위 원 장 김 상 현 (인)

부 위 원 장 이 수 영 (인)

위 원 정 광 호 (인)

1. 국문요약(국문초록)

요약(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원조의 동기적 측면과 문화이론의 관점을 이용하여, 한국 ODA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Q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31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Q 표본과 30명의 P 샘플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ODA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유형은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적극적 인도주의자,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 소극적 인도주의자, 개인주의적 방관자가 그 유형이다. 이 인식유형들은 정부의 ODA 정책 홍보 및 개발교육에 있어 정책대상의 세분화 및 정책대상의 특성에 기초한 전략적 정책추진에 있어 세분화의 준거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 ODA, 공적개발원조, 개발원조, Q 방법론, 인식유형
학 번 : 2013-23652

2. Abstrac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Korean people's cognition types by using the concept of the motives of development aid and culture theory. To this end, this research depends on Q-methodology using a Q-sample that consists of 31 statements and 30 P-samples. The result shows five different cognition types of Korean people towards development aid: active humanitarianist, individualistic realist, patriotic realist, passive humanitarianist and individualistic onlooker. These types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subdividing the objects of development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s and in developing strategic method towards the subdivided policy objects and thus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
keyword : ODA, development aid, foreign aid, Q-methodology,
cognition type
student No. : 2013-23652

〈 목 차 〉

I. 서론	1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3
1. 한국 ODA에 대한 소개	3
(1) 한국 ODA의 역사	3
(2) 한국 ODA의 현황	7
(3)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지지도	9
2.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에 관한 논의	14
(1) 국민인지도와 효과적 원조정책 집행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	14
(2) 선진국의 대외 원조 국민인지 제고 정책 사례	16
(3) 한국 ODA 홍보정책/국민인지 제고 정책의 현황	21
3.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23
(1) 현실주의	23
(2) 자유주의	24
(3) 인도주의	24
(4) KOICA에서 소개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25
(5) 정부 공식 ODA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동기	26
(6) 논의의 종합	26
4. 개발원조 정책 갈등에 대한 문화이론적 접근	28
(1) 문화이론의 개요	28
(2) 문화이론의 방법론	28
(3) ODA 정책에 대한 견해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	30

5. 선행연구	31
(1) Olsen (2000)	31
(2) Otter (2003)	31
(3) Noël, Thérien & Dallaire (2003)	31
(4) Chong & Gradstein (2006)	32
(5) Paxton & Knack (2008)	32
(6) 윤지은 (2006)	33
(7) 전승훈, 유철, 김익기, 이주현 (2008)	33
(8) 이상백 (2009)	34
(9) 김은미 (2011)	34
III. 연구 설계	37
1. Q 표본의 구성틀	37
(1) 패러다임 별 개발원조의 동기	37
(2) 문화이론에 따른 삶의 양식	37
(3) 한국 ODA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38
(4) 종합	38
2. Q 연구 설계	39
(1) Q 표본	39
(2) P 표본	42
(3) Q 분류	43
(4) 자료 분석	44
IV. 분석 결과	45
1. PQMethod를 이용한 분석과정	45
2. 인식유형별 Q 진술문 검토	51
(1) 유형1	51

(2) 유형2	53
(3) 유형3	56
(4) 유형4	58
(5) 유형5	60
3. 인식유형별 차별적 특징	63
(1) 유형1의 차별적 특징	63
(2) 유형2의 차별적 특징	64
(3) 유형3의 차별적 특징	66
(4) 유형4의 차별적 특징	67
(5) 유형5의 차별적 특징	68
4. 유형 간 합의, 불일치 진술문 비교	69
5. 인식유형 종합	71
(1) 유형1 :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active humanitarianist)	71
(2) 유형2 :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형(individualistic realist)	72
(3) 유형3 :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 형(patriotic realist)	73
(4) 유형4 :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passive humanitarianist)	75
(5) 유형5 : 개인주의적 방관자(individualistic onlooker)	76
6. 삶의 양식 측면에서 본 ODA 정책 인식유형	77
(1) 인도주의적 시각과 평등주의적 삶의 양식	78
(2) 현실주의적 시각과 계층주의·개인주의적 삶의 양식	79
(3) 방관자적 시각과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	80
V. 결론	81
1. 연구결과 요약	81
2. 정책적 제언	82
(1)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에 대한 전략	82

(2)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에 대한 전략	83
(3)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 형에 대한 전략	83
(4)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형에 대한 전략	84
(5) 개인주의적 방관자 형에 대한 전략	84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85
< 참고 문헌 >	87

〈 표 차례 〉

〈표 1〉 한국의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9
〈표 2〉 한국 ODA 국민인식조사 내용 요약	10
〈표 3〉 2014년 ODA 국민인식조사 중 원조 찬반 및 확대 찬반에 대한 이유	13
〈표 4〉 독일과 아일랜드의 ODA 국민인지 제고 정책 비교 분석	19
〈표 5〉 KOICA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사업	21
〈표 6〉 개발원조의 동기 종합	26
〈표 7〉 4가지 문화의 유형	29
〈표 8〉 선행연구 정리	36
〈표 9〉 개발 원조 동기와 삶의 양식의 조합	38
〈표 10〉 Q 표본	40
〈표 11〉 Q 분류표	43
〈표 12〉 8개 요인에 대한 고유값 및 변량	46
〈표 13〉 5개 요인 로테이션에 따른 참여자 유형 분류	46
〈표 14〉 각 유형별 연구 참여자의 특징과 인자 가중치	48
〈표 15〉 각 진술문 당 동의와 비동의의 정도	49
〈표 16〉 문화이론의 분석 틀에 나타난 ODA 정책 인식유형	78
〈표 17〉 ODA 인식유형 정리	82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유형을 탐색하는 데 있다. 한국은 개도국의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이하 ODA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뒤, 한국은 신흥 공여국으로서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원 규모는 2013년 기준 GNI의 0.13%로,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0.3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15년까지 ODA 지원 규모를 GNI의 0.25%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ODA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20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ODA의 규모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54.3%였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2.7%였으며,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0%에 불과했다.¹⁾ 또한 국제사회에 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높이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47.5%, 그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4.7%였으나, 이는 전년대비 12.5%p 감소한 수치이다.²⁾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ODA 지원 규모 확대 정책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ODA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ODA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및 인식을 분석한 뒤 효과적인 정책 홍보 수단을 강구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 따라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홍보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민홍보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인지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적 참여와 지지기반을 확대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1) 2014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p.39

2) Ibid. p.45

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사업 홍보 및 인지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다.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내 ODA 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³⁾

그러나 독일이나 아일랜드 등 선진 공여국들의 개발 원조⁴⁾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노력이나 개발 교육 정책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 정부의 국민인지 제고 및 개발 교육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즉, 일관된 정책들과 정책 목표가 부재하여 산발적이고 일회적인 성향이 강하며, 정책 대상 집단별로 구분된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⁵⁾ 본 연구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원조 인지제고 및 교육 정책을 위해 정책 대상 집단을 세분화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개발 원조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개발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개발 원조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인 개발 원조의 필요성은, “개발 원조를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인 개발 원조의 동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발 원조에 대한 여론의 찬성과 반대는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 원조의 여러 가지 동기에 따라, 그리고 문화이론에서 논의하는 삶의 양식과 그에 따른 가치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개발 원조에 대한 인식유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인식 유형의 구분을 통해 개발 원조 홍보 정책 및 개발 교육 정책의 대상 집단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대상 집단별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4) 한국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원조, 대외 원조, 개발 협력 등 여러 단어들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ODA, 또는 개발원조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지칭하도록 한다.

5) 김은미(2011), p.130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한국 ODA에 대한 소개

(1) 한국 ODA의 역사⁶⁾

1) ODA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수원국으로서 한국 ODA의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미군정기로,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미군정 하에서 이루어진 ODA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미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이 내정을 관할하면서 한국으로 지원되는 원조를 직접 관리하였다.

제2기는 1950년대에서 1960년까지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한국 경제의 재건 및 복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시 긴급구호적 원조와 전후복구 및 경제재건 원조를 말한다. 이 시기의 원조는 주로 미국과 UN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제3기는 한국의 경제개발 시기의 전기로, 1961년에서 1975년 사이의 기간을 일컫는다. 이 시기의 원조는 이전의 원조와 그 성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전 시기의 원조가 전후복구 및 경제재건에 초점 맞춘 것이라면, 이때부터의 원조는 경제 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조의 주체도 다각화 되어, 미국 및 UN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원조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이전의 원조가 공여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제3기부터의 원조는 대부분 한국의 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제4기는 한국의 경제개발 시기의 후기로, 1976년에서 1990년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제3기와의 공통점은 개발협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3기와의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개발원조

6) KOICA,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제7장 제1절을 요약, 정리하였다.

중 무상원조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대부분 차관의 형태로 지원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제5기는 한국이 ODA에 있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시기로,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987년에 EDCF의 설립, 1991년에 KOICA가 설립되면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타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시작한 시기이다.

정부 설립 이후 1999년까지 한국이 받은 원조는, 공적·사적 원조를 모두 포함하여 총 139억 7,6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정부 간 원조를 통한 ODA는 127억 7,600만 달러이며, 민간 단체를 매개로 이루어진 원조는 12억 달러로 보인다. 이 중 55%인 약 70억 달러는 무상원조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약 58억 달러는 유상원조로 이루어졌다. 이 유상원조의 증여율은 25% 이상이며, 증여율 25% 미만의 비양허성 공공개발차관은 1999년까지 약 312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약 127억 달러의 ODA 중 양자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이 약 119억 달러로 93%를 차지하며, 다자적 성격의 자금은 7%로 9억 달러 정도이다.

공여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최대 공여국은 미국으로, 양자적으로 지원 받은 자금은 55억 달러를 초과하여, 총 ODA 127억 달러 중 약 43%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큰 공여국은 일본으로, 약 5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그 뒤를 독일, Civil Relief in Korea, IBRD,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아랍제국, 프랑스 등이 따르고 있다.

한국에 지원된 개발원조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이로 말미암아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한국은 특히 기술적 견지에서 인적자본, 정책, 기술, 제도 등의 협력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것이 사업의 성공과 지속성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수원국임에도 개발원조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였고, 사업 추진에 앞서 공여자와의 적극적 대화 및 협의를 중시하여 투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성과 주인의식이 한국에 대한 성공적 개발원조의 원인이 되었다

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인 수원 사례 및 경험은 현재 개발원조의 수원국 및 원조공여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공여국의 측면에서의 한국의 ODA의 역사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공여국으로서 초창기인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이다. 한국이 최초로 공여국으로서 실시한 ODA 사업은 1963년에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저개발국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훈련한 것이었다. 곧 이어 1965년부터는 개발도상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우리 정부 자체의 재원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1967년부터는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 1968년부터는 의료진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타국과 프로젝트식 기술협력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지원받는 단계였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필두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때였다. 이 때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시행한 ODA는 북한과의 외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때 한국의 ODA는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신생독립국들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대에 들어 한국은 신흥공업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고, 이 시기에 새로운 ODA 프로그램으로 태권도 사범 파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또한 1977년부터 무상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이 비동맹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 황금기를 구가한 것, 그리고 닉슨 독트린 및 주한미군 감축, 미중 데탕트,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및 남베트남 패망 등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안보외교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었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 등 한국 ODA의 형태도 다각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에는 개발도상국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nternational Developmet Exchange Program)을 시

작, 1984년에는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 및 직업훈련원 건립 및 운영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의 외채가 감소하고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한국의 ODA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에 따른 국제적 책임 증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시장 증대 및 한국 기업 진출 토대 마련을 위해 ODA가 강화되었다. 1987년에 300억 원을 출연하여 EDCF를 조성하고, ODA 유상협력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한국이 경제와 개발원조를 연계하기 시작한 것이 또한 특징이다.

두 번째 시기는 한국 ODA의 도약기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개발원조를, 1991년 KOICA가 설립되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개발원조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의 ODA는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미 달러 기준 연평균 17.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1996년에 한국이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책임성 또한 아울러 높아졌다. 2006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국 ODA 정책 및 집행의 일관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협력 관련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원조 규모가 일시적으로 축소된 적도 있었지만 곧 기존의 규모를 회복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여국 전환 후 한국의 ODA 규모는 2005년 7억 5,200만 달러, 2007년 약 7억 달러, 2009년 8억 1,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세 번째 시기는 성장기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를 말한다. 2010년은 한국 ODA의 역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해이며, 세 가지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제정 및 발효이다. 이 법은 ODA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개발원조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과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 OECD/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의 가입이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DAC회원국 중에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많은 국제개발 관련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작성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ODA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수립, 한국의 개발경험 관련 개발협력 방안 수립, 범정부적 다자원조 전략 수립 및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강화가 그것이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주도하였고, 2011년에는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조직 및 MDGs 이후의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렇듯 개발원조에 대한 한국의 위상에 제고됨에 따라, 한국은 2015년까지 ODA 원조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한국 ODA의 현황⁷⁾

ODA 지원 규모에 대한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GNI 대비 ODA 규모가 활용된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0.04%에서 0.07% 사이를 오가며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2005년에 GNI 대비 ODA 비율이 0.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0.14%, 2013년 0.13%, 2014년 0.15%를 기록하는 등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수준은 OECD/DAC 회원국 평균인 0.46%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UN 권장 수준인 0.7%와 비교하면 더욱 낮은 수준이다.

지원방식의 측면에서, 2013년 기준 양자간 원조의 비중이 74.6%, 다자간 원조의 비중이 25.4%이며, 양자, 다자 간 7:3 정도의 비율은 2000년 이후로

7) KOICA,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제7장 제2절을 요약, 정리하였다.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의 비율이 2/3를 차지하였으나, 무상원조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 61.8%가 무상원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ODA 지원 현황을 지역·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양자간 ODA의 55.8%가 아시아에 지원되어 지역별로는 가장 비중이 크고, 아프리카가 20.7%, 미주가 7.3%, 중동이 3.1% 등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70%를 초과할 정도였으나, 아시아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2%대였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소득 그룹별로는 2013년 기준 39.4%가 최빈국에, 39.4%가 하위중소득국에, 6.7%가 상위중소득국에 배분된다. 2000년대 초 최빈국 지원의 비중이 22%대였음을 볼 때 최빈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가 4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 중 교육이 16%, 보건이 10.6%, 수자원 및 위생이 7.5% 등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의 비중이 크며, 28.8%를 차지한다. 경제인프라 중에서는 교통 및 물류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생산,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비중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지지도

한국 정부는 1999년에 KOICA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매년 한국의 개발 원조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표 1〉 한국의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도	시행주체	조사기관	대상
1999	KOICA	코리아리서치	전국 성인남녀 1,000명
2002	외교통상부	SIS리서치앤컨설팅	사회주도층인사 200명
2003	KOICA 동아일보	코리아리서치	전국 성인남녀 1,551명
2005	국무조정실	TNS Korea	전국 성인남녀 1,000명
2006	Joins-R&R	리서치앤리서치	전국 성인남녀 700명
2007	외교통상부	한국갤럽	전국 성인남녀 1,220명
2008	외교통상부 국제개발협력학회	한국갤럽	전국 성인남녀 500명
2010	외교통상부	TNS Korea	전국 성인남녀 1,002명
2011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 성인남녀 1,000명
2012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 성인남녀 1,000명
2013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전국 15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500명
2014	국무조정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출처: 김은미(2011, p.115)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가 및 재구성

〈표 2〉 한국 ODA 국민인지조사 내용 요약

연도	개발원조 필요성	ODA 인지도	원조규모	원조확대 견해
1999	필요함 96.1	인지 16.8 비인지 83.2	부족 27.9 적당 47 과다 22.3	-
2002	-	인지 50.3 비인지 49.7	대폭확대 9 어느정도 확대 66.5 현규모 20.5 다소 축소 3	-
2003	-	인지 42.5 비인지 57.5	대폭확대 5.3 약간확대 33.2 현규모 44.9	-
2005	적극찬성 6.7 찬성 55.6 반대 22.8 적극반대 5.4	잘 안다 3.6 어느정도 안다 33.5 들어보았으나 잘 모른다 39.3	대폭확대 7.1 약간확대 40.5 현수준 35.8 축소 13	적극찬성 12.8 찬성 55.4 반대 23.5 적극반대 4.4
2006	-	-	-	늘려야함 38.2 늘릴필요없음 45.7
2007	-	-	확대 56.4 현재수준 28.4 축소 15	-
2008	-	잘 안다 4.8 알고 있다 46 들어보았으나 잘 모른다 32.5 들어본적 없다 16.8	크게 부족 0.6 부족 13 현수준 적절 44 과다 29 크게 과다 4.4	더 증액 7 증액계획적절 12 현수준 유지 53.4 축소 25.6 원조확대반대 2

2010	ODA 홍보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로, 설문문항이 다름			
2011	찬성 89 반대 11	인지 52.4 비인지 47.6	부족 10 현수준 적정 63 과다 27	
2013	찬성 87.3 반대 12.7	인지 64 비인지 36	확대 12.7 적절 72.3 축소 15	약속수준 이상 확대 9.6 약속수준 준수 61.2 확대 반대 18.1 다소 축소 11.1
2014	찬성 86.5 반대 13.5	인지 61.5 비인지 37.6	확대 13 적절 54 축소 32.7	약속수준 이상 4.7 약속수준 준수 47.5 확대 반대 31.1 다소 축소 16.7

출처: 김은미(2011, pp.116~118)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가 및 재구성

개발원조의 필요성 또는 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찬반, 그리고 ODA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ODA 원조규모에 대한 의견, ODA 확대에 대한 의견은 위의 설문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해 온 항목이다. 위의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개발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80~90%의 국민들이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ODA 정책의 인지도는 1999년에는 20%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대 초에는 40~50% 정도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2010년 이후로는 60% 수준으로 상승하여,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ODA 확대에 대한

의견은 초반에는 높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ODA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사람의 비중이 전년대 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원조규모 확대에 대한 견해 역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전반적으로 현 규모 유지 혹은 축소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14년 설문조사에서는 ODA 찬반 여부, ODA 확대 찬반 여부 뿐 아니라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 역시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원조 동기에 관한 인식, 정부 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찬반 이유, 개발원조 규모 확대에 대한 찬반 이유가 포함된다.

여기에 따르면, ODA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제평화와 안정 유지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국제사회의 도의적 책임이라고 한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았다. 수출확대나 외교관계 등 국익의 측면에서 ODA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한 찬성 이유 역시 우리나라도 예전에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개발국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인도주의적 동기가 가장 컸다. 반대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직 부유하지 않아서, 그리고 국내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가장 컸다. 원조 확대에 대한 반대 이유도 이와 유사한데,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3〉 2014년 ODA 국민인식조사 중 원조 찬반 및 확대 찬반에 대한 이유

분류	답변	비중
원조 동기에 관한 인식	국제적 평화와 안정 유지	53.4%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도의적 책임	42.7%
	수출 확대 등 자국의 이익	28.5%
	저개발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19.6%
정부 ODA 찬성 이유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으므로	37.9%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29.0%
	우리나라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이 되므로	12.6%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공존에 기여하므로	10.8%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므로	9.7%
정부 ODA 반대 이유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할만큼 부유하지 않아서	48.9%
	국내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1.1%
	원조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되므로	14.1%
	원조가 저개발국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므로	5.9%
원조 확대 반대 이유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53.6%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15.9%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15.3%
	이미 원조 규모가 크기 때문에	14.0%

정리하자면, 한국은 본격적인 ODA 활동을 시작할 때 즈음인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개발원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발원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절반 이상의 국민이

ODA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DA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다. 과거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작았을 때에는 원조 규모 확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으나, 원조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된 최근 들어서는 원조 확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원조 축소에 대한 의견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OECD 평균 및 UN 권장 수준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15년까지 0.25%를 달성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한 상태이므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및 정책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에 관한 논의

(1) 국민인지도와 효과적 원조정책 집행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⁸⁾ 세 가지 범주는 문제처리의 용이성(tractability of problems), 집행의 구조화에 대한 법규의 능력(ability of state to structure implementation),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non-statutory variables affecting implementation)를 말하며, 비법률적 변수에는 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 대중적 지지, 유권자 집단의 태도, 지배기관의 지지가 포함된다. 다섯 가지 조건은 ① 정책결정이 타당한 인과이론에

8) 정정길 외(2010), p.570 (Sabatier and Mazmanian(1979)를 재인용)

바탕을 둘 것, ② 정책 관련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지니고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 할 것 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집행을 담당할 것, ④ 정책에 대해 이익집단이나 유권자 집단, 입법가나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것 ⑤ 정책목표가 안정적일 것이다.

이에 따르면 ODA 규모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능력, 정책지침, 유능한 관료라는 조건 이외에도 미디어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지도 및 여론의 지지와 개발원조 정책의 효과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Otter(2003)의 연구에서, 선진국 정부가 때로는 개발원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 규모를 축소시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원조 공여국의 개발원조 지원 규모가 원조에 대한 국민지지율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원조 지원 규모가 국민지지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모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원조와 같은 소위 “엘리트 정책”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정책의 방향이 국민의 지지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Olsen(2000)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적 토론이, 개발원조에 대한 여론과 원조 정책 간에 상향식(bottom-up)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데 반해 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유럽의 5개 공여국의 예를 통해 보인다. 5개 공여주체는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그리고 유럽연합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 여론과 개발원조 규모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Olsen은 이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개발원조 정책 결정의 강한 중앙집중도(high degree of centralization of decision-making)이며, 두 번째는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약한 연결고리(weak link between government and society)이다.

반면 OECD 개발센터의 2003년 working paper에서는, 대중적 지지와 ODA 지원 규모 간의 상관관계가 복잡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국

가적 수준에서 ODA 지원 규모에 대한 만족감과 UN의 ODA 목표수치인 GDI 대비 0.7% 달성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Inagaki(2007)의 연구에서,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변화함과 더불어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지 여부, 그리고 개발원조 참여주체들 간의 소통 및 대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정보 교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였다.

현재 효과적인 원조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OECD/DAC에서는 ODA를 포함한 공공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 인지도는 민주국가의 기본이며, 국민인지 제고는 공공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⁹⁾

(2) 선진국의 대외 원조 국민인지 제고 정책 사례

OECD DAC 회원국 중 국민인지 제고 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살펴본다.

1) 독일

독일의 경우, 개발원조 규모 확대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2014년 유로바로미터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개발원조 활동에 대해 약속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은 13%, 약속한 규모대로 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은 62%에 달했다.¹⁰⁾

이처럼 높은 독일 국민들의 지지도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지도 제고를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반증이다. 독일 정부는 2008년 “Strategies 188,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을 발표했다.¹¹⁾ 이는

9) 김은미(2011), p.44

10) EC(2015). Special Eurobarometer 421, p.36

11) BMZ(2008)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Strategies” 188.

개발원조에 대한 인지제고 및 교육에 관한 공식 전략서로서, 인지제고와 개발협력 교육의 목표와 전략, 구체적 방안 등을 아우르고 있다. 독일의 개발협력 교육과 개발원조 홍보 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은 이 전략서를 토대로 하여 수립되었다.

본 전략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개발 교육 및 홍보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독일 개발 정책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지구촌 개발 원칙임을 명시, ②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 ③ 지구촌 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조, ④ 개발원조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유도 및 지원이다. 또한 본 전략서는 개발 교육을 대상을 ① 유소년 층, ② 개발NGO, 종교단체, 기타 기구 및 언론, ③ 개발 원조 관련 행사 참여자로 세분화 한 뒤, 대상에 따라 특화된 정보와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¹²⁾

개발교육의 중장기적 전략으로서, 독일 정부는 “Global Development Education: Cross-curricular framework for global development education in the context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2007년에 발표했다.¹³⁾ 이 전략적 틀은 개발 교육의 원칙, 목표, 핵심 내용, 방향성, 교육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각급 학교와 직업 교육, 공교육 정규 과목에 따라 개발 교육에 대한 상세한 교육 지침을 세워놓고 있다.

독일 정부는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개발원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ll for one world, one world for all” 이라는 행사는 독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로, 개발협력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개발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Weltwärts Development Volunteers Programmes은 청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8세~28세의 자원자에게 6개월~24개월 동안 저개발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의 이러한 개발교육 및 홍보 정책 공식 전략서와, 중장기적 차원에서

12) 김은미(2011). p.97

13) Ibid. p.99

이루어지는 교육 및 참여 유도 활동이, 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의 바탕이라 판단된다.

2)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990년대까지 자국 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게 평가되었고, 이 문제를 인식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2000년대에는 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 정부는 개발원조 교육 및 홍보 정책의 기준으로서, “Deepening public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plan 2003-2005”라는 공식 전략서를 2002년에 발간하였다. 여기에서는 개발 교육 활성화, 개발교육 역량 강화 지원, 일반 국민들의 개발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¹⁴⁾ 또한 정규 교과과정에 개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협력 관련 지식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위의 공식전략서는 2006년에 보강되어,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plan 2007-2011: promoting public engagement for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개발 정책들의 일관성 제고, 개발교육의 정규교과에의 편입, 개발교육의 질 개선, 세계적 빈곤 퇴치에 대한 아일랜드의 역할 환기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¹⁵⁾

개발원조 국민인제 제고 분야에 있어, 아일랜드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중장기적 차원의 개발교육이다. 아일랜드 개발교육은 세계적 빈곤의 원인에 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제고, 이에 대한 개발원조에 필요성 및 책임감 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원조에 대한 참여의 측면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개발협력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해외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외교부 내에서 자원봉사 관련 일을 전담하는 자원봉사과(volunteer corps unit)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14) Irish aid(2006) (김은미(2011, p.106)에서 재인용)

15) Ibid. (김은미(2011, p.108)에서 재인용)

개발교육과 홍보 측면에서의 이러한 아일랜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아일랜드 국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를 높일 수 있었던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는 독일 및 아일랜드의 개발원조 국민인지 제고 정책의 비교 분석표이다.

〈표 4〉 독일과 아일랜드의 ODA 국민인지 제고 정책 비교 분석

	독일	아일랜드
	정책들	
전략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 공식 전략서: 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목표, 전략, 방안 포함 • BMZ, 시민사회, 주정부, 공공집행기구 등 주요 주체 간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epening public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plan 2003-2005 •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plan 2007-2011: promoting public engagement for development • 중장기적 차원의 개발교육 대중화 및 개발협력 정책 간 일관성, 개발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홍보 및 교육 예산 크게 증가(1998년에 220만 유로에서 2005년에 1,000만 유로) • 개발교육 예산의 60%를 시민사회 관련 교육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교육 자문위원회: 과학, 미디어, 교육, 시민사회 분야 대표들로 구성, 개발교육 정책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교육자문위원회: 개발교육 관련 정책 자문 제공
	실행방안 및 도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Z와 유무상 원조집행기구들-개발관련 자료 및 보고서 출판 • 관련 도서 및 영화, 시청각 자료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ish Aid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개발협력 활동 및 글로벌 개발 이슈에 대한 정보 공개, 관련 도서 및 자료 출간 • 뉴스 및 언론보도 확대 • 봉사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대화/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Z의 “개발정책 언론상”: 독일 개발정책의 대중 인식 제고에 기여한 우수 언론 매체, 언론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ish Aid: 2002sus 이후 세계 에이즈의 날, 아프리카의 날 이벤트 개최 •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구촌 개발문제와 세계시민의식 배양을 주제로 한 미술대전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Z - 교육과학부와의 협력 하에 개발교육의 정규 교육 과정으로의 편입을 통한 대중화 • BMZ - Cross-curricular framework for global development education: 개발 교육 원칙과 목표, 핵심 내용과 방향성, 대상 및 활용방안 등 • BMZ - 포털 사이트 “지구촌 학습”을 통해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 지도안과 미디어 교육 자료 제공 • InWEnt - 14개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BMZ를 비롯해 연방 및 주정부 기구 위임 개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캠퍼스 GC21 E-Academy 통해 온라인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부와의 협력 통해 개발교육의 보편화, 대중화 추진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개발협력의 목표, 원칙, 평등과 인권, 호나경과 공정 무역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개발교육 자료 공개 • 개발교육 지원 프로그램 통해 시민사회의 홍보 및 교육 관련 224개 프로젝트 지원 (2003-2005) • 개발교육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동 분야의 학문 저널 창간과 정기적인 학회 개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

출처: 김은미(2011). p.110

(3) 한국 ODA 홍보정책/국민인지 제고 정책의 현황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원조 국민인지 제고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개발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KOICA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ODA 세미나 개최, 대학생 논문 공모전, NGO를 통한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KOICA는 각급 학교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상별 국제개발협력 교육 자료를 발간하였다. 넷째, KOICA는 개발원조 인지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의 개발원조 관련 워크숍, 세미나, 박람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KOICA가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5〉 KOICA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사업

	기관명	사업명
1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실무전문가 과정
2	고려대학교	대전충남지역 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
3	국경없는교육가회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4	농촌여성신문사/ 국제지역개발연구원	여성단체회원 교육을 통한 KOICA 개발협력 인지강화 사업 - 5대 광역지역을 중심으로
5	삼동회 인터내셔널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2009 세계 빈곤 퇴치의 날' 기념 이벤트
6	서비스포비스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
7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와 진로탐색
8	유럽-코리아 재단	공정무역에 관한 국내인식 강화
9	유스클럽	청년이 주도하는 참여형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사업 "88만원 세대의 새로운 대안 - 국제개발협력"
10	은평천사원	희망콘서트 "아프리카 아동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11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 박람회
12	지구촌나눔운동	MDGs 목표달성을 위한 다섯 발자국
13	플랜한국위원회	네이버 공동캠페인 '라이브 아프리카'
14	하트하트재단	개발협력 인지강화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러브"

15	한국국제개발연구소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16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워크숍1(이론), 2(실기)
17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국제협력특강
18	한 끼의 식사기금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Grow School”
19	한서대학교	국제청소년세미나(주제: 한국 및 동남아 국가의 재난 시 보건의료활동 비교 세미나)
20	한일장신대학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집중 세미나

출처: KOICA 민간협력팀 자료제공 (김은미(2011)에서 재인용)

또한 KOICA는 대학교 내 교양 또는 기초전공과목으로 국제개발협력과정 개설 등을 지원하였다. KOICA는 대학교 내 교과목 개설을 통한 개발원조 인지강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지원 규모 및 대상 기관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KOICA ODA 교육원에서 개발원조 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KOICA는 개발원조에 대한 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 및 대학교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차원의 개발원조 인지 제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인지 제고 관련 투자 및 재원이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현재 인지 제고 프로그램은 하나의 거대한 정책 틀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이고 산발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 셋째,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가 부재하다는 것, 넷째, 정책대상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다섯째, 학계 및 NGO, 언론과의 협력을 통한 ODA 홍보가 선진공여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 여섯째, KOICA와 외교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것이다.¹⁶⁾

16) 김은미(2011). p.130

3.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의 행태 및 특정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국가들이 개발원조를 하는 동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각 국제정치 패러다임 별로,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본다.

(1) 현실주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국제체제를 국가 상위의 정치체제가 부재한 무정부상태(anarchy)로 파악하고, 국가들 간의 무력 사용을 제재하는 기제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들은 서로의 존재로부터 안보의 위협을 느낀다고 본다. 이로 인해 국가들에게 있어 생존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며, 이를 위해 권력(power)을 추구하게 된다.¹⁷⁾ 이 때 권력이란 군사력이나 경제력, 혹은 문화적인 힘 등 타국에게 영향을 미쳐 자국의 안보 확보에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힘을 일컫는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국가들의 행위는 거의 대부분 자국의 안보 및 이익추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며, 국가들 간의 협력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국제기구 역시 표면적으로는 초국가적 협력과 범지구적 가치추구를 내세우지만, 타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강대국의 이해를 반영할 뿐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개발원조 정책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¹⁸⁾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행된 미국의 마셜플랜을 들 수 있다. 마셜플랜은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전후 국가 재건을 돕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국가들에 구소련의 영향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 유럽의 공산화 방지라는 안보추구를 목적

17) Waltz(1979). (하영선 외, 변환의 세계정치(2012 p.190)에서 재인용)

18) Lancaster(2007). (하영선 외, 변환의 세계정치(2012 p.318)에서 재인용)

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의 경우에도, 선진 공여국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원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2) 자유주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 번째 입장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라는 현실주의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으로 인해 국가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상호의존론의 입장이며, 두 번째 입장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전제로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간의 협력이 현실주의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이다.¹⁹⁾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공통적으로 국가들은 안보추구보다도 경제적 이익 추구를 우선할 수 있으며, 국가들 간의 협력 역시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본다.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제3세계에 개발원조를 통해 수출 시장 확대, 천연 자원 확보,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3) 인도주의

위의 두 관점이 공통적으로 개발원조의 동기를 국익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면, 인도주의는 윤리와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개발원조를 하는 동기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 것처럼 빈곤국의 기아와 질병 등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세계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주의 패러다임과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국제사회를 국가라는 단위로 분절된 곳으로 보는 반면, 인도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세

19) 하영선 외, *변환의 세계정치*(2012) p.200

계시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개발원조가 공여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들은 전 세계적 기아와 빈곤, 질병 문제 해결을 통해 세계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선진국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4) KOICA에서 소개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KOICA에서 개발원조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펴낸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책에도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개발원조의 동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정치·외교적 동기로서, 개발원조를 통한 자국의 안보 획득 및 외교적 영향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동기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에 전후복구 자금을 제공한 미국의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유럽에 대한 공산주의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지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다. 두 번째는 개발적 동기로서, 개도국의 경제 안정, 개도국의 기술수준 상승, 사회경제적 인프라 건설 등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인도주의적 동기로서, 개발원조를 세계적인 절대빈곤 감소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 이 동기는 세계시민은 국제사회에서 기아와 빈곤, 재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은 상업적 동기로서, 개발원조를 통해 전략적인 자원 확보 및 수출 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동기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이 있다.

KOICA에서 소개하는 이상의 개발원조 동기들은 모두 위에서 논의한 이론적 틀에 부합된다. 정치·외교적 동기의 경우에는 현실주의, 개발적 동기와 인도주의적 동기의 경우에는 인도주의, 상업적 동기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ODA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정부 공식 ODA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동기

한국 정부의 ODA 정책 관련 공식홈페이지인 ‘ODA Korea’에서도 개발원조의 동기를 네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²⁰⁾ 첫 번째는 정치·외교적 동기로, KOICA에서 말하는 정치·외교적 동기와 동일하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동기로, KOICA에서 말하는 상업적 동기와 동일하다. 세 번째는 인도주의적 동기로, KOICA에서 말하는 인도주의적 동기와 동일하다. 네 번째는 상호의존적 동기로, 이 동기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상호의존론의 입장에서 개발원조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다. 즉, 오늘날 국가들은 서로 의존적이어서 제3세계의 빈곤·기아·환경 문제가 국경을 넘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발 원조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6) 논의의 종합

이상에서 논의한 개발원조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에는 정치·외교적 동기가 포함되며, 자유주의 패러다임에는 상업적 동기, 경제적 동기, 상호의존적 동기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주의 패러다임에는 인도주의적 동기와 개발적 동기가 포함된다.

20)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2.jsp (2015년 5월 19일 검색)

〈표 6〉 개발원조의 동기 종합

국제정치 패러다임	KOICA의 개발원조 동기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 동기
현실주의	정치·외교적 동기	정치·외교적 동기
자유주의	상업적 동기	경제적 동기 상호의존적 동기
인도주의	인도주의적 동기 개발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

위에서 논의한 개발원조의 동기들은 곧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발원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개발원조의 동기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처럼, 개발원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도 다양할 것이다. 개발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개발원조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초점을 달리하여야 전략적인 국민인지 제고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개발원조 정책 갈등에 대한 문화이론적 접근

(1) 문화이론의 개요

문화이론은 영국의 인류학자인 M. 더글러스(Douglas)가 창시한 이론으로서, 정책현상의 이해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화를 외생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화이론에서는 문화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보고, 문화가 사회의 형성, 유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한다.²¹⁾

(2) 문화이론의 방법론

1) 문화의 구성요소

문화이론에서는 사회가 형성, 유지, 변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문화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와 가치(values)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²²⁾ 사회적 관계란 사회 구성원들이 권리와 의무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역할(grid)’과 ‘집단(group)’으로 나눌 수 있다. ‘역할’이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에 대해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구성원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역할이 강할수록 성별, 연령, 계층 등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반대로 역할이 약할수록 위의 요소들이 개인의 자율성을 구속하는 정도가 약하다. ‘집단’이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집단이 강할수록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 주변 사람이나 집단이 가지는 의미가 커지게 된다. 반면에 집단이 약할수록 구성원들 상호 간의 연대가 약해지고 방어적, 경쟁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21) 김종완(2002). 문화이론의 이해. pp.2-3

22) ibid. p.3

가치는 특정 사회 및 집단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나 행위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성된다. 어느 집단에서든 그 집단을 유지하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데 특정한 관계가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2) 문화의 유형

역할과 집단의 조합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문화가 도출된다. 이러한 문화 유형을 삶의 양식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표 7〉 4가지 문화의 유형

		집단 (group)	
		약	강
역할 (grid)	강	운명주의 (fatalism)	계층주의 (hierarchy)
	약	개인주의 (individualism)	평등주의 (egalitarianism)

출처: 정정길 외(2010)

첫 번째, 계층주의 문화는 역할도 강하고 집단도 강한 상태에서 나타난다. 즉, 개개인의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구속력도 강하지만, 집단 구성원 간의 유대감도 강하다. 이러한 문화에서 개인은 전체의 조화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²³⁾

23) 정정길 외(2010). p.752

두 번째, 개인주의 문화는 역할도 약하고 집단도 약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계층주의 문화의 대척점에 서 있다. 즉,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여 구성원 간 평등을 지향하지만, 구성원 간의 유대감도 약하다.

세 번째, 평등주의 문화는 역할은 약하지만 집단은 강한 상태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구성원을 억압하는 사회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구성원 간의 유대감은 강하다. 평등주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협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정부나 시장이 아닌 공동체를 통한 공동선을 추구한다.²⁴⁾

네 번째, 운명주의 문화는 역할은 강하지만 집단은 약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평등주의 문화의 대척점에 위치한다. 사회적 구속력이 강하여 개인의 자율성이 약한 상태이지만,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역시 약하다. 이러한 문화권에서 구성원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거나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²⁵⁾

(3) ODA 정책에 대한 견해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

ODA 정책과 같이 국민들 중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정책의 경우, 그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Paxton & Knack(2008)에 따르면 개발원조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종교적 독실함,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의견, 사람에 대한 신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두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로, ODA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가 개인의 가치관 또는 문화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이론에 따르면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양식에 따라 자연관 및 사회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그것이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가져온다.²⁶⁾ 따라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유형 파악에 있어 문화이론은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24) Ibid.

25) 김종민(2002). p.10

26) 이선우(2002). 정책갈등의 문화적 분석, p.129

5. 선행연구

(1) Olsen (2000)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적 토론이, 개발원조에 대한 여론과 원조 정책 간에 상향식(bottom-up)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5개 공여국의 예를 통해 보인다. 5개 공여주체는 모두 유럽국가로서,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그리고 유럽연합이다. 이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개발원조 정책 결정의 강한 중앙집중도(high degree of centralization of decision-making), 두 번째는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약한 연결고리이다.

(2) Otter (2003)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 정부가 때로는 개발원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도도 불구하고 개발원조 규모를 축소시키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원조 공여국의 개발원조 지원 규모가 원조에 대한 국민지지율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원조 지원 규모가 국민지지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모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원조와 같은 소위 “엘리트 정책”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정책의 방향이 국민의 지지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3) Noël, Thérien & Dallaire (2003)

이 연구는 캐나다 국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지지를 통해 캐나다 국제주의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선 캐나다 국민들은 개발원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면서도, 개발원조에 대한 지지는 표면

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로, 캐나다 국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지지는 진보적 국제주의와 보수적 국제주의(liberal and conservative internationalism)로 갈라지는데, 이는 국내 이념 및 당파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캐나다의 국제주의는, 일반적인 인상과는 달리 활발하지도(vigorous), 전 국민에 걸쳐 합의적이지도(consensual) 않다는 결론이다.

(4) Chong & Gradstein (2006)

이 연구에서도 역시 원조 공여국의 유권자들이 개발원조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World Value Survey와 공여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두 데이터에서 분석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정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의 상대적 임금이 높을수록 국민들은 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5) Paxton & Knack (2008)

이 연구는 개발원조 공여국에서 개발원조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95년 World Values Survey를 통해 획득한, 9개국의 약 6,000명에 대한 데이터 및 2002년 갤럽에서 실시한 Voice of the People이라는 여론조사에서 17개 공여국의 개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원조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종교적 독실함(religiosity), 빈곤의 원인에 대한 입장(position on the causes of poverty), 국제적 사안에 대한 인지 정도(awareness of international affairs) 그리고 사람과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trust in people and institutions)가 도출되었다.

(6) 윤지은 (2006)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ODA 홍보 및 교육의 주체를 정부, 언론, 개발 NGO로 상정하고, 한국의 ODA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세 주체의 현재 ODA 홍보, 교육 실태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ODA에 대한 국민지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각 주체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주도 홍보 교육 대안으로는 ODA에 대한 분명한 이념 정립과 목표 설정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 KOICA 알리기, ODA 공론화 추진, 교육과정에 ODA 관련 내용 삽입, 세계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주도 홍보, 교육 대안으로는 ODA에 대한 논의의 공론화 및 이슈화, ODA 관련 특정 코너 또는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ODA가 가지는 인적자원 및 소재의 다양함 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NGO 주도 홍보, 교육 대안으로는 개발NGO의 정보 및 경험을 ODA 교육에 이용, 개발 NGO 간의 연합을 통한 홍보, 교육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언론, 개발NGO 간의 상호견제 및 의존을 통한 win-win 전략의 가능성을 내 보이고 있다.

(7) 전승훈, 유철, 김익기, 이주현 (2008)

이 연구에서는 2008년에 이루어진 개발원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 인지도 향상 필요, ② 원조 규모, 지역, 분야 등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국민들의 선호도 반영 필요, ③ 원조 효과성을 제고, 한국의 발전경험 전달 정책 수립, 개발원조 투명성 제고 필요, ④ 원조 활동에 있어 민간협력 촉진, 정책 홍보, 정보제공 확대 노력 필요. 이 연구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볼 수 있다.

(8) 이상백 (2009)

한국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를 위한 정부차원, 민간차원의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협력 교육의 차원에서 조사, 정리하고, 이 분야에서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직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개발협력 교육 분야에서의 향후 과제로, ① 개발협력 교육의 목표와 용어 정의의 명확화, ② 개발협력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형성, ③ 민관합동 개발협력 교육위원회 등 창설, ④ 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확보와 증대, ⑤ 개발협력 교육 특화 기관 및 단체 설립, ⑥ 한국 상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⑦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개발협력 교육 협의체 및 협조체제 형성을 들고 있다.

(9) 김은미 (2011)

이 연구는 선진 공여국들의 국민인지 제고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인지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따르면, 개발원조 정책에 있어 국민인지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UNDP의 개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제언과 OECD/DAC의 국민인지 제고 정책 관련 권고사항 등이 있다. UNDP에서는 원조 프로그램의 집행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수립, 목표 대상 설정, 대상 그룹의 특성 및 관심사 파악, 특정 이슈에 대해 해당 그룹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ECD/DAC의 권고사항에서는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의 인지 수준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정책의 정당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인지 제고 방안으로 ①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② 홍보 및 캠페인, ③ 개발 및 글로벌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공여국의 국민인지 제고 방안에 있어,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 개발 협력 정책 홍보 및 교육을 위한 공식 전략서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OECD/DAC 회원국의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정책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① ODA 인지 제고 정책은 중장기적 차원의 세계화 시민 양성을 위한 개발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② 개발협력 홍보 및 교육 위한 공식적 전략 수립 필요하며, ③ 정기적, 종합적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통해 국민인식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④ 홍보 및 교육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 미디어, 학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책틀로서, 개발원조 인지 제고를 위한 전략서 개발, 예산 확보,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 기제 도입, 여론조사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별 국민인지 제고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개발원조 정책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캠페인을 제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개발원조 교육의 원칙과 목표 수립, 통일된 내용 설정, 학생들을 위한 교재 개발, 일반 시민들의 개발현장 참여를 통한 정책지지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OECD/DAC 소속 선진 공여국들의 국민인지 제고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 한국의 ODA 국민인지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 ODA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개발원조 정책 홍보와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개발원조 정책 홍보 및 교육에 있어 정책대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정 기준에 따라 정책대상 집단을 나누어 보려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외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유형을 파악하여, 향후 개발원조 홍보 및 교육 정책에서 대상집단별 전략수립에 있어 전략적 집단 구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표 8〉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주요 내용
Olsen (2000)	경험적 연구의 결과, 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원조 정책 간에 역의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개발 원조 정책의 강한 중앙집중도와 개발 원조 분야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연결 고리가 약하기 때문임
Otter (2003)	경험적 연구의 결과, 원조 지원 규모와 국민지지가 정의 관계와 역의 관계 모두 나타남: 엘리트 정책의 경우 정책 방향이 국민 지지와 무관히 나타날 수 있음
Noël, Thérien & Dallaire (2003)	캐나다 국민들은 개발 원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개발 원조에 대한 지지는 진보적, 보수적 국제주의로 양분되어 있음
Chong & Gradstein (2006)	공여국 유권자들 중 정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상대적 임금이 높을수록 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Paxton & Knack (2008)	공여국의 개발 원조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 요소로 종교적 독실함, 빈곤의 원인에 대한 입장, 국제적 사안에 대한 인지 정도, 사람과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가 있음
윤지은 (2006)	한국의 ODA 홍보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홍보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ODA에 대한 국민지지 제고를 위한 대안을 각 주체별로 제시
전승훈, 유철, 김익기, 이주현 (2008)	2008년 이루어진 개발원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함: 국민인지도 향상 필요, 정책에 국민 선호도 반영 필요, 원조 효과성 제고 필요, 민간협력 촉진 필요.
이상백 (2009)	정부차원, 민간차원의 개발협력 교육 사업 조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향후 과제 제시: 개발 교육의 용어, 목표 명확화, 개발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설정, 민관합동 교육위원회 창설, 예산확보 및 증대, 개발협력 교육 특화 기관 설립, 한국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김은미 (2011)	선진 공여국들의 국민인지 제고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원조 인지 제고 방안 제시: 개발 원조 인지 제고를 위한 전략서 개발, 예산 확보,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기제 도입 등

III. 연구 설계

1. Q 표본의 구성틀

(1) 패러다임 별 개발원조의 동기

국민들이 개발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한 견해는 개발원조 확대 및 축소에 대한 견해와도 연결된다.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및 원조 확대 정책에 대한 지지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한 견해에 맞추어 홍보 및 교육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착안하여,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개발원조의 동기를 수집하여 분류하였다. 개발원조의 동기는 우선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개발원조의 동기와 관련된 질문의 응답지에서 추출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ODA Korea 홈페이지 및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에 소개된 ODA의 동기에서 관련 문장을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추출된 문장들을 국제정치학 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라 분류하였다. 국제정치학 이론의 패러다임으로는 현실주의(realist perspective), 자유주의(liberalist perspective), 구조주의(Structuralist perspective), 구성주의(constructivist perspective) 등이 있으나,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한 입장은 크게 현실주의적 입장, 자유주의적 입장, 인도주의적 입장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문화이론에 따른 삶의 양식

문화이론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가치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양식을 분석틀로 이용한다. 역할과 집단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관계를 각각 하나의 축으로 하면 이와 관련되는 가치에 따라 네 가지의 삶의

양식을 도식화 할 수 있다. 집단과 역할이 모두 강한 경우인 계층주의, 집단과 역할이 모두 약한 개인주의, 집단은 강하지만 역할이 약한 평등주의, 집단은 약하지만 역할이 강한 운명주의가 그것이다.

(3) 한국 ODA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ODA에 대한 국민인식유형 조사에서는 한국 ODA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다. 여기에서 한국 ODA가 가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 네 가지 문제를 추출하여 Q 진술문에 포함시켰다.

(4) 종합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나타내는 데에는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으로 분류한 개발원조에 대한 동기와 문화이론에서 상정하는 네 가지 삶의 양식을 종합하여 Q 표본의 구성틀을 도출하였다.

〈표 9〉 개발 원조 동기와 삶의 양식의 조합

	현실주의	자유주의	인도주의
계층주의	(1)	(2)	(3)
개인주의	(4)	(5)	(6)
평등주의	(7)	(8)	(9)
운명주의	(10)	(11)	(12)

이 틀에 의하면 개발원조 동기에 대한 3가지 관점과 4가지 삶의 양식이 결합하여 12가지의 관점-삶의 양식 조합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한 관점이 뚜렷한 한 가지 관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혼재된 관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나타나는 인식유형은 더 복잡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ODA의 문제점 4가지에 대한 진술문을 추가함으로써, 특정 관점과 삶의 양식을 가진 유형이 한국 ODA의 어떤 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인식유형 틀은 ODA 국민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정책 설계에 있어, 정책대상집단의 설정과 대상집단별 집행전략 도출에 있어 중요한 근거이자 유용한 사고의 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Q 연구 설계

(1) Q 표본

본 연구는 한국 ODA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점 및 삶의 양식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의 집합이라 볼 수 있는 Q 모집단에서 추출한 진술문들이 Q 표본이다.

본 연구의 Q 표본은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ODA 관련 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으며, Q 모집단에서 Q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제정치학적 패러다임과 문화이론의 삶의 양식에 근거하여 표본을 선택한 구조화 표본(structured sample)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Q 표본은 다음과 같다.

〈표 10〉 Q 표본

현실주의 관점 (5)	국제사회는 법이나 도덕보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외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안보 위협이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OECD 국가와 같은 규모의 대외 원조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타국을 돕기 이전에 국내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유주의 관점 (5)	대외 원조에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대외 원조 확대는 수출시장 확대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세계의 빈곤이나 정치적 불안정이 국제테러 등을 통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대외 원조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타국을 적극적으로 원조할 만큼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대외 원조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제로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므로 원조 규모 확대에 반대한다.
인도주의 관점 (5)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3세계의 빈곤 퇴치에 이바지 할 의무가 있다.
	개발국가의 국익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제3세계 빈곤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대외 원조는 원조공여국의 국익보다는 수원국의 필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윤리 및 도덕적 규범이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을 때 받은 국제 원조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ODA 정책의 문제점 (4)	ODA 관련 전문가가 부족이 한국 ODA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원조 집행 기관 간의 협력 및 소통 부족이 한국 ODA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ODA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가 부족이 한국 ODA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ODA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이 한국 ODA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group (6)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인 나의 성향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내가 속한 집단(가족, 회사, 조직)에서 내린 결정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여 가급적 따라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기분이 좋다.
	나의 기분은 주변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grid (6)	상사의 요구에는 부당한 면이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조리한 점을 발견했더라도,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요즘 조직 내에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 형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사람들과의 의논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조직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일부 희생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나의 동료나 상사가 내 의견이나 감정 상태를 존중하고, 나 역시 상대방에 대해 그러하다.

우선, 개발원조의 동기에 대한 진술문의 경우, 각 관점별로 5개의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각 관점별로, 진술문은 ODA에 대해 긍정적인 진술문과 부정적인 진술문, 그리고 각 관점별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을 나타내는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는 법이나 도덕보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라는 진술문은 국제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을 나타내는 진술문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외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진술문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ODA에 대한 찬성을 나타내는 진술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안보 위협이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OECD 국가와 같은 규모의 대외 원조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라는 진술문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ODA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진술문이다.

한국 ODA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진술문의 경우, 국민인식조사 설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 4가지 문제점 - ODA 전문가 부족, 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 ODA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부족, 정책 투명성 부족을 각각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을 담은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이론적 삶의 양식에 대한 진술문의 경우, 집단과 역할이라는 두 스펙트럼의 강약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는 문장은 약한 집단을 나타내는 진술문이며, “나의 기분은 주변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장은 강한 집단을 나타내는 진술문이다. 또한 “상사의 요구에는 부당한 면이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문장은 강한 역할을 나타내는 문장이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의논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라는 문장은 약한 역할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렇게 구성된 31개의 진술문을 무작위 순서로 배열하여, 최종적으로 Q 표본이 구성되었다.

(2) P 표본

P 표본은 Q 방법론 설문조사의 응답자를 말한다. Q 방법론에서는 R 방법론에서처럼 개인의 특성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이 생각하는 의미의 중요도에 있어서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연구의 일반화가 아니라 생각이나 인식의 유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표본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Q 방법론을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30명 내외의 P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본 연구에서도 30명의 P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P 표본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자, 교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선정하였다. 연령면에서도 10대에서 50대까지 한쪽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P 표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 Q 분류

Q 분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① 연구 참여자에게 31개의 Q 진술문을 읽게 한다. 이 때, 이해하기 힘들거나 애매모호한 문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연구 참여자의 의문을 해소한다.

② 각 진술문에 대해 참여자가 동의하는 진술문과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의 진술문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③ 동의하는 문장들 중, 동의의 정도가 가장 강한 진술문부터 Q 분류표의 +4에 있는 칸에 그 진술문의 번호를 적어놓도록 한다. 그리고 동의의 정도가 약해질수록 +3, +2, +1로 차츰 안쪽에 있는 칸에 Q 진술문 번호를 적도록 한다.

④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과 중립적인 진술문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진술문 번호를 빈 칸에 적도록 한다.

⑤ Q 분류표의 31개의 칸이 모두 채워지면 Q 분류는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진술문의 숫자가 많아 참여자가 진술문 간의 비교를 통한 강제 배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동의의 정도에 따라 진술문에 점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점수배분 방식으로 Q 분류를 실시하였다.

〈표 11〉 Q 분류표

				5				
		4	4		4	4		
	3						3	
2								2
-4	-3	-2	-1	0	1	2	3	4
가장 비동의				중립				가장 동의

(4) 자료 분석

수집된 Q 분류의 분석에는 Q 방법론 분석 프로그램인 PQMethod 프로그램이 이용된다. Q 방법론 연구에서 사용되는 요인 추출 방법에는 센트로이드 분석과 주성분 요인분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한다.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경우를 각 유형간 고유성을 있다고 인정하여 주요 요인들을 추출한 뒤, 추출된 요인들 간에 직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배리맥스 방식으로 로테이션을 실시한다. 이 방식으로 P 표본 간의 유형이 분류되는데, 이 때 각 유형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들을 중심으로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한다.

IV. 분석 결과

1. PQMethod를 이용한 분석과정

PQMethod 프로그램에서 주성분 요인분석은 최대 8개의 요인을 생성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성분 요인분석을 한 결과, 8개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유값(eigen value) 및 적재값 백분율이 도출되었다. 여기서 고유값이 1 이상이 나와서 의미가 있는 요인은 모두 8개이다. 그 다음 단계로 배리맥스 방식을 이용해 이 요인들을 회전시킨 후, 최종적으로 Q 분석으로 인식유형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배리맥스 방식으로 로테이션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의 단점은 요인들 간 차별성이 흐려진다는 점이다. 또한 몇 개의 요인을 로테이션 하는 것이 가장 특성화된 유형 도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로테이션 하는 요인의 수를 조정해 가면서 가장 특성화된 요인을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로테이션 결과, 6개 이상의 요인을 로테이션 할 경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이 일치하는 유사 유형이 많이 나타나, 유형 간의 특성화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요인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질 경우에는 변량값이 낮게 나와 전체적인 설명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요인을 3개로 하여 로테이션을 실시한 경우, 변량의 총합이 54%로 나왔고, 요인을 4개로 하였을 경우에는 변량의 총합이 61%, 요인을 5개로 하였을 경우에는 변량의 총합이 65%가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는 5개가 가장 적절한 수의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표 12> 8개 요인에 대한 고유값 및 변량

Unrotated Factor Matrix								
	Factors							
	1	2	3	4	5	6	7	8
SORTS								
1 id01	0.5084	0.5210	0.1850	-0.0208	0.4948	0.0739	0.0258	-0.1404
2 id02	0.6325	-0.0434	-0.2505	0.0609	-0.0022	0.4816	-0.0010	-0.0934
3 id03	0.5052	-0.0986	0.4575	0.2356	0.4645	-0.2414	-0.0799	-0.1486
28 id28	0.4817	-0.0930	0.1140	0.3561	0.0371	0.1251	0.6615	-0.1603
29 id29	0.3611	-0.0926	0.6227	-0.2665	0.0914	-0.2198	0.2595	0.3360
30 id30	0.3363	0.0820	0.5919	0.1465	-0.4270	-0.0469	-0.2758	-0.2290
Eigenvalues	9.9637	3.5029	2.7140	1.8132	1.6314	1.4005	1.1196	1.0437
% expl.Var.	33	12	9	6	5	5	4	3

<표 13> 5개 요인 로테이션에 따른 참여자 유형 분류

Factor Matrix with an X Indicating a Defining Sort					
	Loadings				
QSORT	1	2	3	4	5
1 id01	0.0472	0.7614X	0.4597	0.0822	-0.0971
2 id02	0.5684X	0.2343	0.0364	0.2956	-0.0410
3 id03	0.2009	0.1708	0.8067X	0.1415	0.0714
4 id04	-0.1373	0.7081X	0.0083	0.0418	0.4041
5 id03	0.2488	0.1196	-0.0646	0.7455X	-0.2382
6 id06	0.5239	0.0005	0.4902	0.0403	0.5043
7 id07	0.7272X	-0.2820	0.2331	0.1141	0.0440
8 id08	0.8672X	0.2189	0.1373	-0.0168	0.1024
9 id09	0.8427X	0.1054	0.1069	0.1030	0.0261
10 id10	0.2049	0.7230X	-0.1154	0.3529	-0.0132

11 id11	0.2983	0.2866	0.1026	0.6619X	0.1706
12 id12	0.6491X	0.2287	0.3013	0.4217	-0.0715
13 id13	0.3984	0.5114	0.0678	0.1090	-0.3996
14 id14	0.0488	0.7644X	0.2366	0.0404	0.1108
15 id15	0.2558	-0.0858	0.6276X	-0.0923	0.3867
16 id16	0.8231X	0.1210	0.0299	0.1061	-0.0774
17 id17	0.4883	0.4120	0.0374	0.3190	0.1883
18 id18	0.3767	0.6358X	0.1821	0.1231	0.1321
19 id19	0.8251X	0.0172	-0.0425	-0.2524	0.2856
20 id20	0.7572X	0.0042	0.1594	0.3004	0.0836
21 id21	0.6873X	0.4151	0.1968	0.1111	-0.0319
22 id22	0.3293	0.4021	-0.0631	0.1292	0.6914X
23 id23	0.2104	0.5299X	-0.2141	0.0097	-0.0608
24 id24	0.7276X	0.2352	-0.0188	0.2923	0.2320
25 id25	0.0235	0.6903X	-0.1911	0.1003	0.1809
26 id26	-0.0058	0.1040	0.0748	0.7075X	0.3590
27 id27	0.0028	-0.0739	0.6229X	0.0887	-0.0446
28 id28	0.2836	0.0486	0.3393	0.4119	0.1198
29 id29	0.1878	0.1771	0.4925	-0.2957	0.4577
30 id30	0.0164	0.0921	0.2047	0.2150	0.7597X
% expl.Var.	24	15	9	9	8

5개 요인으로 배리맥스 로테이션을 한 결과, 위의 표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변량의 총합은 65%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연구 참여자 30명 중 유형1에는 10명, 유형2에는 7명, 유형3에는 3명, 유형4에는 3명, 유형5에는 2명이 나타났다. <표 14>에는 각 유형별 연구 참여자의 특징과 인자 가중치가 나타나 있다.

〈표 14〉 각 유형별 연구 참여자의 특징과 인자 가중치

유형	변량	응답자 번호	성별	연령	직업	인자 가중치
유형1 (n=10)	24	2	여	41	교직원	0.5684
		7	남	59	은행원	0.7272
		8	여	36	행정학전공 대학원생	0.8672
		9	남	32	회사원	0.8427
		12	남	31	검사	0.6491
		16	남	59	사회복지사	0.8231
		19	여	28	고등학교 교사	0.8251
		20	여	32	공단 직원	0.7572
		21	여	31	경영 컨설턴트	0.6873
		24	여	25	경영 컨설턴트	0.7276
유형2 (n=7)	15	1	남	32	경영학전공 대학원생	0.7614
		4	남	36	컴퓨터 프로그래머	0.7081
		10	여	29	회사원	0.7230
		14	남	59	감정평가사	0.7644
		18	여	18	고등학생	0.6358
		23	여	26	행정학전공 대학생	0.5299
		25	남	17	고등학생	0.6903
유형3 (n=3)	9	3	여	28	정책학전공 대학원생	0.8067
		15	남	53	고위공무원	0.6276
		27	남	36	철학전공 대학원생	0.6229
유형4 (n=3)	9	5	남	33	회사원	0.7455
		11	여	34	로스쿨 학생	0.6619

		26	여	32	공연예술계 종사자	0.7075
유형5 (n=2)	8	22	남	35	물리학전공 대학원생	0.6914
		30	남	18	고등학생	0.7597

각 유형은 Q 진술문에 대해 유사한 생각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의 집합이다. 연구 참여자들 간의 생각의 유사함과 상이함은 어떤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지로 판단된다. <표 15>는 유형별로 31개 진술문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5> 각 진술문 당 동의와 비동의의 정도

Factor Q-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							
No.	Statement	No.	Factor Arrays				
			1	2	3	4	5
1	제3세계 빈곤 퇴치 의무	1	4	-1	0	0	0
2	나의 일을 더 잘하는 것	2	2	1	1	-3	2
3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	3	-2	0	3	3	1
4	의논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4	2	-2	-1	2	2
5	개인의 사생활 준수	5	0	0	0	-2	-2
6	국제적 위상 제고	6	0	-1	2	-1	-3
7	수출 확대 및 에너지 확보	7	2	0	3	0	-2
8	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	8	-1	-3	0	1	-2
9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 문제 접근	9	4	1	0	3	3
10	독립적인 나의 성향	10	0	0	2	0	4
11	힘의 논리 지배 사회	11	3	2	4	-2	4
12	다른 사람들과 협력	12	3	0	3	3	0
13	ODA 전문가 부족	13	0	-1	-1	2	-1
14	국제테러 등 국제사회 위협	14	0	-4	2	-2	-3
15	부당한 상사의 요구	15	-1	-2	-2	-3	-1

16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안보 위협	16	-3	1	-2	-4	-1
17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17	-3	-3	-3	-3	-4
18	ODA 대국민 홍보 부족	18	-1	-2	-4	-1	-3
19	수원국의 필요	19	3	3	-1	1	2
20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	20	-2	3	1	0	2
21	비창의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	21	-2	-3	4	1	1
22	부유한 국가가 아님	22	-4	-1	-2	-1	0
23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23	2	2	1	-1	1
24	국내문제를 우선 해결	24	-3	4	-1	4	0
25	ODA 정책 투명성 부족	25	-2	-2	-4	2	0
26	국제사회의 윤리 및 도덕적 규범	26	1	2	0	4	3
27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27	-4	-4	-3	-4	-1
28	자유 희생은 나의 동의를 거쳐야 함	28	-1	4	2	-2	2
29	국제 원조의 고마움	29	1	3	1	2	-4
30	내 의견이나 감정 상태를 존중	30	1	2	-2	1	1
31	집단에서 내린 결정 중요	31	1	1	-4	0	-2

Variance = 5.097 St. Dev. = 2.258

유형1의 경우, 1번과 9번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고 22번과 27번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2의 경우, 24번과 28번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고, 14번과 27번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3의 경우, 11번과 21번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고, 25번과 31번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4의 경우 24번과 26번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고, 16번과 27번과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5의 경우 10번과 11번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고, 17번과 29번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별 진술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유형의 특징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인식유형별 Q 진술문 검토

(1) 유형1

Factor Scores -- For Factor 1			
No.	Statement	No.	Z-SCORES
9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 문제 접근	9	1.650
1	제3세계 빈곤 퇴치 의무	1	1.623
19	수원국의 필요	19	1.592
11	힘의 논리 지배 사회	11	1.529
20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	20	-1.073
16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안보 위협	16	-1.415
17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17	-1.426
24	국내문제를 우선 해결	24	-1.567
22	부유한 국가가 아님	22	-1.812
27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27	-2.078

번호	구분	진술문	표준점수 (Z-scores)
9	인도주의적 찬성	개별국가의 국익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제3세계 빈곤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1.650
1	인도주의적 찬성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3세계의 빈곤 퇴치에 이바지 할 의무가 있다.	1.623
19	인도주의적 찬성	대외 원조는 원조공여국의 국익보다는 수원국의 필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1.592
11	현실주의적 관점	국제사회는 법이나 도덕보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1.529

20	현실주의적 반대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1.073
16	현실주의적 반대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안보 위협이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OECD 국가와 같은 규모의 대외 원조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1.415
17	강한 역할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조리한 점을 발견했더라도,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1.426
24	현실주의적 반대	타국을 돕기 이전에 국내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567
22	자유주의적 반대	우리나라는 아직 타국을 적극적으로 원조할 만큼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1.812
27	자유주의적 반대	대외 원조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제로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므로 원조 규모 확대에 반대한다.	-2.078

유형1을 보면, 개발원조에 대한 인도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제3세계 빈곤문제에 대해 개별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맥락에서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3세계 빈곤퇴치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 유형은 개발원조에 대해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즉,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또는 우리나라가 아직 부유하지 않거나 국내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원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배경한다. 하지만 다소 뜻밖에도 이 유형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에 가깝다. 즉, 이 유형은 국제사회에 대해 현실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개발원조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삶의 양식 측면에서 보면, 표준점수 절대값 1점 이상에서는 강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동의를 보일 뿐 뚜렷한 삶의 양식이 나타나지 않는데, 표준점수 절대값 1점 이하의 진술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경우, 약한 평등주의적 삶

의 양식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현실주의적인 국제사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원조에 대해서는 강한 인도주의적 시각을 가진 유형으로, 삶의 양식 측면에서는 약한 평등주의적 경향을 나타낸다.

(2) 유형2

Factor Scores -- For Factor 2			
No.	Statement	No.	Z-SCORES
24	국내문제를 우선 해결	24	1.642
28	자유 희생은 나의 동의를 거쳐야 함	28	1.635
20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	20	1.502
29	국제 원조의 고마움	29	1.479
19	수원국의 필요	19	1.151
30	내 의견이나 감정 상태를 존중	30	1.131
25	ODA 정책 투명성 부족	25	-1.068
15	부당한 상사의 요구	15	-1.169
8	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	8	-1.255
17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17	-1.260
21	비창의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	21	-1.289
14	국제테러 등 국제사회 위협	14	-1.421
27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27	-1.988

번호	구분	진술문	표준점수 (Z-scores)
24	현실주의적 반대	타국을 돕기 이전에 국내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642
28	약한 역할	조직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일부 희생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635

20	현실주의적 반대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1.502
29	인도주의적 찬성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을 때 받은 국제 원조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1.479
19	인도주의적 찬성	대외 원조는 원조공여국의 국익보다는 수원국의 필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1.151
30	약한 역할	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나의 동료나 상사가 내 의견이나 감정 상태를 존중하고, 나 역시 상대방에 대해 그러하다.	1.131
25	ODA 문제점	ODA 정책의 투명성 부족이 한국 ODA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1.068
15	강한 역할	상사의 요구에는 부당한 면이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1.169
8	ODA 문제점	원조 집행 기관 간의 협력 및 소통 부족이 한국 ODA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1.255
17	강한 역할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조리한 점을 발견했더라도,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1.260
21	강한 역할	요즈음 조직 내에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 형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1.289
14	자유주의적 찬성	제3세계의 빈곤이나 정치적 불안정이 국제테러 등을 통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대외 원조를 해야 한다.	-1.421
27	자유주의적	대외 원조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제로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므로 원조 규모 확대에 반대한다.	-1.988

유형2의 경우, 개발원조에 대해 강한 현실주의적 반대의 시각과 다소 약한 인도주의적인 찬성의 시각을 모두 견지하고 있다. 즉, 한국이 과거에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은 데 대한 심리적 부채감을 가지고 있으며,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이익보다는 원조수원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기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원조 규모 증가에 대한 약속보다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기 이전에 국내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의 특이한 점은, 개발원조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원조에 대한 윤리적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입장의 또 다른 특이점은 ODA 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이나 ODA 정책의 투명성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삶의 양식 측면에서, 이 유형은 약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매우 강한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장 등에서 구성원들끼리 의견이나 감정 상태를 상호 존중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자신이 속한 조직이 비교적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며, 부당한 상사의 요구나 조직의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느낀다. 반면 집단에 대한 인식은 모호하게 나타난다. 표준점수 절대값 1점 이하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즉, 이 유형은 삶의 양식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역할 정도가 매우 약하면서,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의 중간에 위치하는 양식이라 볼 수 있다.

(3) 유형3

Factor Scores -- For Factor 3			
No.	Statement	No.	Z-SCORES
11	힘의 논리 지배 사회	11	1.936
21	비창의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	21	1.904
7	수출 확대 및 에너지 확보	7	1.550
12	다른 사람들과 협력	12	1.355
3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	3	1.257
6	국제적 위상 제고	6	1.097
17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17	-1.097
27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27	-1.171
25	ODA 정책 투명성 부족	25	-1.257
31	집단에서 내린 결정 중요	31	-1.257
18	ODA 대국민 홍보 부족	18	-2.064

번호	구분	진술문	표준점수 (Z-scores)
11	현실주의적 관점	국제사회는 법이나 도덕보다는 군사력 이나 경제력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1.936
21	강한 역할	요즈음 조직 내에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 형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 가 속한 조직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1.904
7	자유주의적 찬성	대외 원조 확대는 수출시장 확대 및 에 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 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550
12	강한 집단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기분이 좋다.	1.355
3	자유주의적 관점	대외 원조에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1.257
6	현실주의적 찬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외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1.097
17	강한 역할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조리한 점을 발견 했더라도,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	-1.097

		기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27	자유주의적 반대	대외 원조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제로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므로 원조 규모 확대에 반대한다.	-1.171
25	ODA 문제점	ODA 정책의 투명성 부족이 한국 ODA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1.257
31	강한 집단	내가 속한 집단(가족, 회사, 조직)에서 내린 결정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여 가급적 따라야 한다.	-1.257
18	ODA 문제점	ODA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가 부족이 한국 ODA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2.064

유형3의 경우, 우선 국제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찬성을 나타낸다. 즉, 개발원조를 한국의 수출시장 확대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또한 개발원조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즉, 철저하게 국익의 측면에서 개발원조를 바라보고 있다.

삶의 양식 측면에서는 모호한 모습이 나타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비창의적이고 수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직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등 수동적으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좋아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내린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데는 반대한다. 이러한 모습은 Q 진술문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어 한 가지 진술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나타난다. 이는 차후 인터뷰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결과 삶의 양식 측면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다소 지닌 계층주의적 삶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유형3의 경우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국제사회를 바라보며, 개발원조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이나 한국의 영향력 확대 등 국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삶의 양식 측면에서는 다소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계층주의적 삶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4) 유형4

Factor Scores -- For Factor 4			
No.	Statement	No.	Z-SCORES
26	국제사회의 윤리 및 도덕적 규범	26	2.064
24	국내문제를 우선 해결	24	1.476
12	다른 사람들과 협력	12	1.448
9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 문제 접근	9	1.108
14	국제테러 등 국제사회 위협	14	-1.074
5	개인의 사생활 준수	5	-1.139
2	나의 일을 더 잘하는 것	2	-1.391
15	부당한 상사의 요구	15	-1.448
17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17	-1.448
16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안보 위협	16	-1.629
27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27	-2.064

번호	구분	진술문	표준점수 (Z-scores)
26	인도주의적 관점	국제사회에서도 윤리 및 도덕적 규범 이 의미를 가진다.	2.064
24	현실주의적 반대	타국을 돕기 이전에 국내문제를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476
12	강한 집단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기분이 좋다.	1.448
9	인도주의적 찬성	개별국가의 국익 차원이 아니라 세계 적 차원에서 제3세계 빈곤 문제에 접 근해야 한다.	1.108
14	자유주의적 찬성	제3세계의 빈곤이나 정치적 불안정이 국제테러 등을 통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대외 원조를 해야 한다.	-1.074

5	약한 집단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	-1.139
2	약한 집단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1.391
15	강한 역할	상사의 요구에는 부당한 면이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1.448
17	강한 역할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조리한 점을 발견했더라도,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1.448
16	현실주의적 반대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안보 위협이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OECD 국가와 같은 규모의 대외 원조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1.629
27	자유주의적 반대	대외 원조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제로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므로 원조 규모 확대에 반대한다.	-2.064

유형4의 경우, 우선 국제사회에서 윤리 및 도덕적 규범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3세계 빈곤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의 국익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개발원조에 대한 인도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발원조를 하기 앞서 국내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표준점수 절대값 0.9점까지를 고려한다면 개발원조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도 나타난다. 즉, 이 입장은 개발원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내문제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개발원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입장이다.

삶의 양식 측면에서는, 뚜렷한 평등주의적 경향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좋아하고, 나의 일만 잘하기 보다는 팀워크를 중요시 하며, 개인의 사생활은 때에 따라 희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직 내 부조리가 있을 시 지시하는 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입

장이다.

종합적으로, 이 입장은 평등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지닌 유형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원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찬성하고 있으나, 국내문제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조건적 개발원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5) 유형5

Factor Scores -- For Factor 5			
No.	Statement	No.	Z-SCORES
10	독립적인 나의 성향	10	1.710
11	힘의 논리 지배 사회	11	1.573
26	국제사회의 윤리 및 도덕적 규범	26	1.361
9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 문제 접근	9	1.286
4	의논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4	1.210
20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	20	1.210
18	ODA 대국민 홍보 부족	18	-1.074
6	국제적 위상 제고	6	-1.210
17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17	-1.785
29	국제 원조의 고마움	29	-1.997

번호	구분	진술문	표준점수 (Z-scores)
10	약한 집단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인 나의 성향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1.710
11	현실주의적 관점	국제사회는 법이나 도덕보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1.573
26	인도주의적 관점	국제사회에서도 윤리 및 도덕적 규범이 의미를 가진다.	1.361

9	인도주의적 찬성	개별국가의 국익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제3세계 빈곤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1.286
4	약한 역할	직장이나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사람들과의 의논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1.210
20	현실주의적 반대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1.210
18	ODA 문제점	ODA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가 부족이 한국 ODA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1.074
6	현실주의적 찬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외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1.210
17	강한 역할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조리한 점을 발견했다라도,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1.785
29	인도주의적 찬성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을 때 받은 국제 원조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97

유형5의 경우,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은 현실주의적 시각과 이상주의적 시각이 혼재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과 마찬가지로, 개발원조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이 혼재한다. 즉, 개발원조에 있어 개별국가의 국익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조 규모 확대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또한 보인다. 표준점수 절대값 0.9점까지 고려할 경우, 개발원조는 공여국의 국익보다는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개발원조를 해야 한다거나 제3세계 빈곤 문제로 인해 국제 테러가 만연하게 될 위험 때문에 원조를 해야 한다는 타산적인 입장은 배격하는 편이다.

삶의 양식 측면에서, 이 유형은 뚜렷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 독립적인 자신의 성향을 중시하며, 팀워크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의논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한다고 생각하며, 상부의 압력 때문에 조직의 부조리에 대해 수동적을 대처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유형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윤리와 도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발원조에 대해서도 현실주의적 입장과 인도주의적 입장이 공존한다.

3. 인식유형별 차별적 특징

각 유형별 진술문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유형별 특징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서로 다른 유형에서 같은 진술문에 대한 가장 동의 또는 가장 비동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각 유형별 특징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각 유형별 차별적 특징을 사용할 수 있다.

PQMethod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다른 선호도를 나타내는 진술문을 선별하여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각 유형별 차별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유형1의 차별적 특징

Distinguishing Statements for Factor 1											
(P < .05 :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ce at P < .01)											
Both the Factor Q-Sort Value (Q-SV) and the Z-Score (Z-SCR) are Shown.											
Factors											
No. Statement		1	2	3	4	5					
		Q-SV	Z-SCR	Q-SV	Z-SCR	Q-SV	Z-SCR	Q-SV	Z-SCR	Q-SV	Z-SCR
1 제3세계 빈곤 퇴치 의무 ...	1	4	1.62*	-1	-0.43	0	-0.10	0	0.25	0	-0.08
3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 ...	3	-2	-0.43	0	0.29	3	1.26	3	0.99	1	0.50
21 비창의적이고 수직적인 ...	21	-2	-0.57*	-3	-1.29	4	1.90	1	0.30	1	0.44
20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 ...	20	-2	-1.07*	3	1.50	1	0.29	0	0.18	2	1.21
24 국내문제를 우선 해결 ...	24	-3	-1.57*	4	1.64	-1	-0.39	4	1.48	0	0.21
22 부유한 국가가 아님 ...	22	-4	-1.81*	-1	-0.64	-2	-0.67	-1	-0.49	0	-0.06

번호	진술문	원점수
1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3세계의 빈곤 퇴치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4

3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2
21	요즈음 조직 내에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 형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2
20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2
24	타국을 돕기 이전에 국내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22	우리나라는 아직 타국을 적극적으로 원조할 만큼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4

유형1의 경우 가장 차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1번과 22번 진술문이다. 1번은 개발원조에 대한 강한 인도주의적 찬성의 시각을 드러내는 진술문이며, 22번은 강한 현실주의적 반대의 시각을 드러내는 진술문이다. 유형1은 1번 진술문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동의를 표시했고, 22번 진술문에 대해서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24번 진술문 또한 유형1의 차별적 특징을 나타낸다. 24번 진술문 역시 현실주의적 개발원조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진술문이며, 유형1은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를 통해, 유형1은 강한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개발원조에 대해 찬성하며, 현실주의적인 개발원조 반대 시각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는 점이 가장 차별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2) 유형2의 차별적 특징

Distinguishing Statements for Factor 2												
(P < .05 ;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ce at P < .01)												
Both the Factor Q-Sort Value (Q-SV) and the Z-Score (Z-SCR) are Shown.												
Factors												
	1		2		3		4		5			
No. Statement	No.	Q-SV	Z-SCR	No.	Q-SV	Z-SCR	No.	Q-SV	Z-SCR	No.	Q-SV	Z-SCR

28 자유 희생은 나의 동의 ...	28	-1	-0.11	4	1.63	2	0.97	-2	-0.59	2	0.85
29 국제 원조의 고마움...이 ...	29	1	0.49	3	1.48	1	0.12	2	0.63	-4	-2.00
16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	16	-3	-1.41	1	0.35	-2	-0.68	-4	-1.63	-1	-0.56
21 비창의적이고 수직적인 ...	21	-2	-0.57	-3	-1.29*	4	1.90	1	0.30	1	0.44

번호	진술문	원점수
28	조직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일부 희생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4
29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을 때 받은 국제 원조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16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안보 위협이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OECD 국가와 같은 규모의 대외 원조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1
21	요즈음 조직 내에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 형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3

유형2의 경우, 차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28번과 21번이다. 28번 진술문의 경우, 약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21번 진술문의 경우, 강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유형2는 28번 진술문에 대해서는 강한 동의를 표시하고, 21번 진술문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유형2의 차별적인 특징은 약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한 동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9번 진술문에 대해서도 강한 동의를 표시했는데, 29번 진술문은 우리나라가 받았던 국제원조의 고마움에 대한 것으로, 과거 한국이 받았던 원조에 대한 심리적 부채감이 유형2의 차별적 특징 중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형3의 차별적 특징

Distinguishing Statements for Factor 3											
(P < .05 ;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ce at P < .01)											
Both the Factor Q-Sort Value (Q-SV) and the Z-Score (Z-SCR) are Shown.											
Factors											
No. Statement		1	2	3	4	5					
	No.	Q-SV	Z-SCR	Q-SV	Z-SCR	Q-SV	Z-SCR	Q-SV	Z-SCR	Q-SV	Z-SCR
21	비창의적이고 수직적인 ...	21	-2 -0.57	-3 -1.29	4 1.90*	1 0.30	1 0.44				
7	수출 확대 및 에너지 확 ...	7	2 0.71	0 -0.13	3 1.55*	0 0.22	-2 -0.79				
6	국제적 위상 제고_현실 ...	6	0 0.19	-1 -0.53	2 1.10*	-1 0.00	-3 -1.21				
19	수원국의 필요_이상찬?...	19	3 1.59	3 1.15	-1 -0.54*	1 0.49	2 1.00				
30	내 의견이나 감정 상태 ...	30	1 0.34	2 1.13	-2 -0.84*	1 0.46	1 0.42				
18	ODA 대국민 홍보 부족 ...	18	-1 -0.27	-2 -0.69	-4 -2.06	-1 -0.17	-3 -1.07				

번호	진술문	원점수
21	요즈음 조직 내에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 형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4
7	대외 원조 확대는 수출시장 확대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6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외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2
19	대외 원조는 원조공여국*의 국익보다는 수원국**의 필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1
30	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나의 동료나 상사가 내 의견이나 감정 상태를 존중하고, 나 역시 상대방에 대해 그러하다.	-2
18	ODA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가 부족이 한국 ODA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4

유형3의 경우, 가장 차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21번과 18번이다. 21번 진술문은 강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술문이며, 18번은 ODA 관련 교육 및 홍보 부족에 대한 진술문이다. 유형3은 21번 진술문에 대해서는 강한 동의를 표시하였고, 18번 진술문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표시하였다. 즉, 유

형3의 차별적 특징은 강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동의와, 교육 및 홍보의 부족이 ODA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유형3은 7번 진술문에 대해서도 강한 동의를 표시했는데, 이는 개발원조에 대한 자유주의적 찬성 입장이 유형3의 차별적 특징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4) 유형4의 차별적 특징

Distinguishing Statements for Factor 4										
(P < .05 ;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ce at P < .01)										
Both the Factor Q-Sort Value (Q-SV) and the Z-Score (Z-SCR) are Shown.										
Factors										
No. Statement	1		2		3		4		5	
	Nb	Q-SV/Z-SCR	Q-SV/Z-SCR	Q-SV/Z-SCR	Q-SV/Z-SCR	Q-SV/Z-SCR	Q-SV/Z-SCR	Q-SV/Z-SCR	Q-SV/Z-SCR	
11 힘의 논리 지배 사회-현 ...	11	3 1.53	2 0.90	4 1.94	-2 -0.65*	4 1.57				
2 나의 일을 더 잘하는 것 ...	2	2 0.54	1 0.44	1 0.26	-3 -1.39*	2 0.92				

번호	진술문	원점수
11	국제사회는 법이나 도덕보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2
2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3

유형4의 경우, 차별적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11번과 2번이다. 11번은 국제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유형들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 동의한 데 반해, 오직 유형4의 경우에만 이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유형4는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번 진술문은 약한 집단성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유형4는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강한 집단성이 유형4의 차별적 특징 중 하나임을 나타낸다.

(5) 유형5의 차별적 특징

Distinguishing Statements for Factor 5											
(P < .05 ;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ce at P < .01)											
Both the Factor Q-Sort Value (Q-SV) and the Z-Score (Z-SCR) are Shown.											
Factors											
		1		2		3		4		5	
No. Statement	Nb.	Q-SV	Z-SCR	Q-SV	Z-SCR	Q-SV	Z-SCR	Q-SV	Z-SCR	Q-SV	Z-SCR
10 독립적인 나의 성향_집 ...	10	0	0.33	0	0.26	2	0.55	0	0.27	4	1.71*
29 국제 원조의 고마움_이 ...	29	1	0.49	3	1.48	1	0.12	2	0.63	-4	-2.00*

번호	진술문	원점수
10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인 나의 성향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4
29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을 때 받은 국제 원조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유형5의 경우, 차별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장은 10번과 29번이다. 10번의 경우, 약한 집단성을 나타내는 진술문이며, 29번의 경우, 인도주의적인 개발 원조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받은 국제 원조에 대한 심리적 부채감을 나타낸다. 유형5는 10번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하는데, 이는 유형5의 차별적 특징이 약한 집단성임을 나타낸다. 또한 유형5는 29번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는데, 다른 유형들이 이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는 긍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유형은 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는 별개로, 과거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에 대해 심리적 부채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터뷰 결과, 이 유형은 타국이 우리나라에 해 준 원조 역시 그 나라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지 딱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타적인 의도로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심리적 부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형 간 합의, 불일치 진술문 비교

Factor Q-Sort Values for Statements sorted by Consensus vs. Disagreement (Variance across Factor Z-Scores)							
No.	Statement	No.	Factor Arrays				
			1	2	3	4	5
17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_역할 강	17	-3	-3	-3	-3	-4
23	주변사람들과의 관계_집단 강	23	2	2	1	-1	1
15	부당한 상사의 요구_역할 강	15	-1	-2	-2	-3	-1
13	ODA 전문가 부족	13	0	-1	-1	2	-1
5	개인의 사생활 준수_집단 약	5	0	0	0	-2	-2
10	독립적인 나의 생활_집단 약	10	0	0	2	0	4
27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_자유반대	27	-4	-4	-3	-4	-1
8	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	8	-1	-3	0	1	-2
22	부유한 국가가 아님_자유반대	22	-4	-1	-2	-1	0
3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_자유	3	-2	0	3	3	1
9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 문제 접근_이상찬성	9	4	1	0	3	3
30	내 의견이나 감정 상태를 존중_역할 약	30	1	2	-2	1	1
12	다른 사람들과 협력_집단 강	12	3	0	3	3	0
18	ODA 대국민 홍보 부족	18	-1	-2	-4	-1	-3
16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인보 위협_현실반대	16	-3	1	-2	-4	-1
31	집단에서 내린 결정 중요_집단 강	31	1	1	-4	0	-2
26	국제사회의 윤리 및 도덕적 규범_이상	26	1	2	0	4	3
1	제3세계 빈곤 퇴치 의무_이상찬성	1	4	-1	0	0	0
19	수원국의 필요_이상찬성	19	3	3	-1	1	2
14	국제테러 등 국제사회 위협_자유찬성	14	0	-4	2	-2	-3
4	의논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_역할 약	4	2	-2	-1	2	2
25	ODA 정책 투명성 부족	25	-2	-2	-4	2	0
6	국제적 위상 제고_현실찬성	6	0	-1	2	-1	-3
7	수출 확대 및 애너지 확보_자유찬성	7	2	0	3	0	-2
28	자유 희생은 나의 동의를 거쳐야 함_역할 약	28	-1	4	2	-2	2
2	나의 일을 더 잘하는 것_집단 약	2	2	1	1	-3	2
20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_현실반대	20	-2	3	1	0	2
11	힘의 논리 지배 사회-현실	11	3	2	4	-2	4
21	비장의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 _역할 강	21	-2	-3	4	1	1
29	국제 원조의 고마움_이상찬성	29	1	3	1	2	-4
24	국내문제를 우선 해결_현실반대	24	-3	4	-1	4	0

PQMethod 프로그램에서는 각각의 유형이 31개의 진술문 중 어느 진술문에 공통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을 나타내었는지를 분석하여 보여준다. 위의 표를 보면, 17번, 23번, 15번 등의 진술문에는 5개의 유형 모두가 비슷한 정도의 동의를 나타내었고, 반대로 24번, 29번, 21번, 11번 진술문에서는 큰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개발원조보다 국내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한국이 과거에 받은 국제원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자신이 속한 조직이 비창의적이고 수직적이라는 주장,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주장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조직 내의 부조리에 대해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섯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강한 부정을 표시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크게 좌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유형이 약한 동의의 입장을 보였다. 또한 상사의 부당한 요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유형이 약한 부정의 입장을 표시했다.

5. 인식유형 종합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PQMethod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각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후속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인식유형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유형1 :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active humanitarianist)

유형1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과, 개발원조에 대한 강한 인도주의적 시각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표면적으로는 상충하는 가치인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유형1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인터뷰에 응한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이다.

“국제뉴스 등을 보면 국제사회가 강대국들 간의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아마 개발원조에 열성적인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에 대한 계산 없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현재 국제사회가 가진 한계라고 생각하며, 이는 깨어 있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점차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3세계의 빈곤·기아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도덕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행동하는 것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학과 대학원생 L씨의 답변

“저는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와 함께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옵니다. 저도,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그래야 한다는 시각은 아닙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제고등학교 교사 K씨의 답변

“저는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해서 그런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나눔과 베품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문제도 한 국가 내의 복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유 있는 국가들이 조금씩 힘을 내서 힘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지요. 물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국가 경제나 안보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대외 원조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사 J씨의 답변

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 유형1의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과 저개발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발원조는 개인의 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국제문제에 관심이 많고, 개발원조에 대해서도 단순히 정부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원조 활동에 참여할 정도의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개발원조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감을 나타낸다. 이 유형은 또한 삶의 양식 측면에서는, 약한 평등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개발원조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드러내고 도덕적인 견지에서 개발원조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형2 :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형(individualistic realist)

이 유형은 개발원조에 대한 강한 현실주의적 반대의 입장과 다소 약한 인도주의적 입장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으로 개발원조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시한다. 현실주의와 인도주의의 혼재에 대하여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제3세계의 빈곤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타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국가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심각해진 시기에 원조 규모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선 좀 부정적입니다. 남을 돕는 것 좋지만 그걸 위해서 자국 국민의 삶의 질을 희생하는 건 안 되죠.” - 경영학과 대학원생 K씨의 답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주력 분야이던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추격해오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뭐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때라고 보는데, 이럴 때 원조 규모 증가라는 건 솔직히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규모를 늘리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다지만 우리나라 국내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게임회사 프로그래머 H씨의 답변

이에 따르면 유형2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원조 제공 자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 문제가 많은 점 등을 들어 개발원조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Q 표본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터뷰 결과 대체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개발원조 자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원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에 현재 여유가 없으므로 개발원조 확대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유형3 :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 형(patriotic realist)

이 유형의 특징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개발원조를 한국의 수출시장 확대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 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는 아래와 같다.

“대외 원조는 개발도상국 기아나 빈곤 문제 해결이 일차적 목표겠지만, 돕는 우리나라 입장에서서는 들이는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정치력이나 경제력으로 움직이는 거고, 사실 선진국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대외 원조를 하는 건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비난을 피하려는 이유도 크겠죠. 뉴스를 봐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제3세계를 돕는 건 결국 경제적인 계산,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거라고 나오잖아요.” - 행정학과 대학원생 E씨의 답변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마냥 도덕적인 시각에서 원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원조에 쓰이는 돈도 결국 다 국민 세금인데, 국가가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있나요. 개발도상국을 돕는 좋은 일에 쓰이는 건 맞지만 기왕이면 돕는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이익, 정치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도록 계획하는 겁니다. - 중앙부처 2급 공무원 I씨의 답변

이상의 인터뷰 결과, 유형3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개발원조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삶의 양식 측면에서, Q 표본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터뷰 결과 다소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계층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현실주의적 국익추구자’ 형으로 볼 수 있다.

(4) 유형4 :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passive humanitarianist)

유형4의 경우, 가장 차별적인 특징은 국제사회에서 윤리 및 도덕적 규범이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또한 개발원조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발 원조를 하기 앞서 우리나라의 국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되는 부분에 있어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해 보았다.

“개발도상국을 돕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니 실업이니 어려운 상황이라 개도국 돕자는 주장에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신문 사설에서 본 것 같은데, 청년실업이 심하니 우리 청년들 보고 국내에서 경쟁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는 논지였어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정보도 부족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정부가 길을 좀 닦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 대기업 사원 K씨의 답변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일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내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술계만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개발국 돕기 위해서 세금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꼭 돈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의 지원도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공연예술계 종사자 K씨의 답변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서, 유형4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4의 경우, 국제사회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개발원조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 등 국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발 원조 확대가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삶의 양식 측면에서는 뚜렷한 평등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유형5 : 개인주의적 방관자(individualistic onlooker)

유형5의 특징은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현실주의적 시각과 이상주의적 시각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원조에 대한 시각도 인도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 유형의 차별적 특징은, 과거 한국이 받은 개발원조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진술문에 대해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본 유형에 속한 참여자들을 인터뷰 해 보았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어떨 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UN이나 유네스코가 하는 활동을 보면 도덕이나 윤리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개도국 원조의 경우에도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죠. … 아,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의 고마움에 대한 질문이라면, 뭐랄까, 선진국들도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윤리적 의무로 원조를 해 주었다기보다는 자기 나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준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빚진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죠.” - 물리학과 대학원생 H씨의 답변

“아,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거랑 윤리 및 도덕적 규범이 의미를 가진다는 문장에 모두 동의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틀린 건가요? 아, 정답은 없고….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 생각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네, 제가 좀 국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어요. 후진국 지원하는 것도 일단 좋은 일인 것인데, 뭐 지금 우리나라도 청년실업이니 힘들다는데 굳이 그런 걸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 고등학생 J군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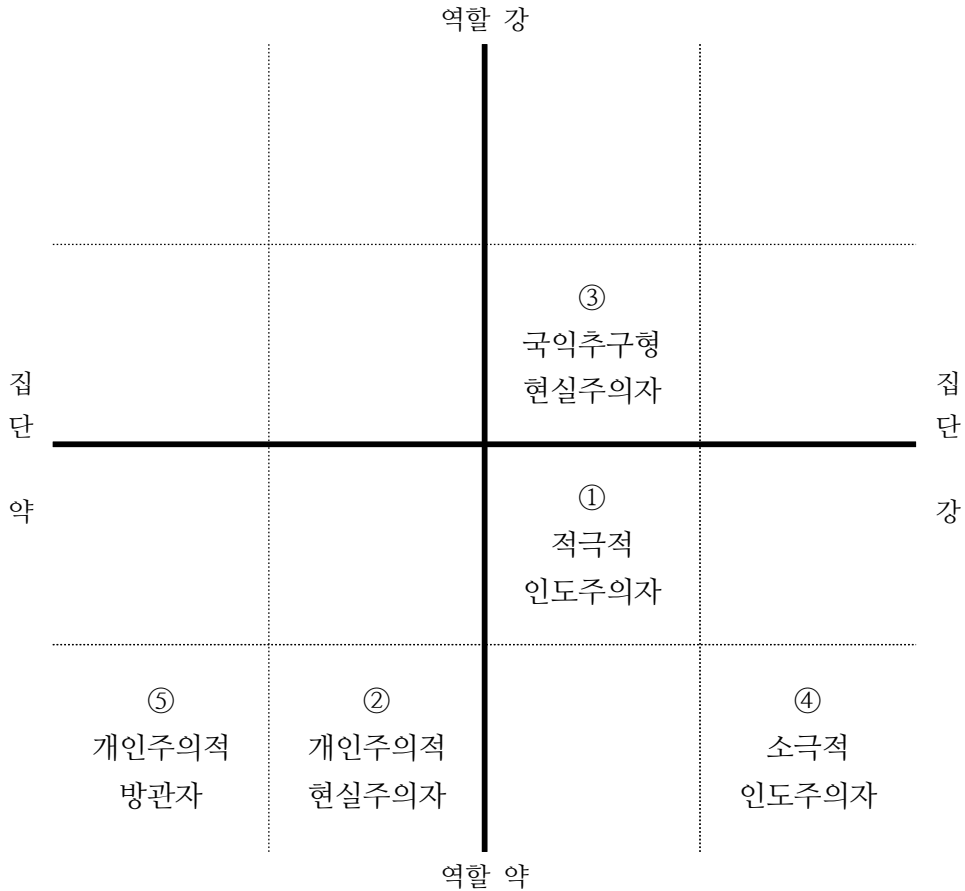
인터뷰 결과, 이 유형은 전반적으로 국제 이슈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이나 개발원조에 대한 시각에서 상반되는 입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관심의 결여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특징은 뚜렷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이나 개발원조에 대한 찬반 등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큰 유형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향 때문에 한국이 과거에 받은 원조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진술문에 강한 부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슷한 유형인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형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종합적으로,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개발원조 등 국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유형은 ‘개인주의적 방관자’형이라고 볼 수 있다.

6. 삶의 양식 측면에서 본 ODA 정책 인식유형

다음은 ODA 정책에 대한 다섯 가지 인식유형을 문화이론의 분석 틀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1번의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이 약한 평등주의, 4번의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이 강한 평등주의, 3번의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 형이 약한 계층주의, 2번의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형이 평등주의에 가까운 개인주의, 5번의 개인주의적 방관자 형이 강한 개인주의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인도주의가 강한 유형은 평등주의 삶의 양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현실주의가 강한 유형은 개인주의와 계층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6〉 문화이론의 분석 틀에 나타난 ODA 정책 인식유형



(1) 인도주의적 시각과 평등주의적 삶의 양식

사회적인 구속이 약하여 개인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약하면서도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은 강한 평등주의적 문화는 일반적으로 도덕심, 이타주의와 친화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등주의적 문화에서 개발원조에 대한 인도주의적 시각이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 보다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이 더 강한 평등주의적 문화를 나

타낸 것은 다소 상식과 벗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참여자들과 인터뷰 한 결과,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은 국제 이슈 및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문화이론적 진술문에 대한 찬성도가 낮게 나타났고,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은 국제 이슈 및 개발 원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문화이론적 진술문에 대한 찬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개발원조 관련 진술문과 문화이론 관련 진술문이 하나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본 연구의 Q 모집단 구성이 드러낸 한계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이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에 비해 평등주의적 경향이 낮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의 국제 이슈 및 개발원조 이슈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현실주의적 시각과 계층주의 ·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와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의 경우, 인도주의적 시각 보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개발 원조를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개인주의, 후자는 계층주의의 삶의 양식을 나타내므로 개발 원조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의 경우, 국가와 정부의 입장에서 개발 원조를 바라본다. 개발원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명목상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긴 해도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원국의 입장에서만 원조를 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의 경우,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개발 원조를 바라본다.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개발원조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같은 현실주의적 입장을 나타내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유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3) 방관자적 시각과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섯 인식유형 중 가장 뚜렷한 삶의 양식을 나타낸 유형이 바로 개인주의적 방관자 형이다. 이 유형은 개발원조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정치적 담론보다는 개인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의 구속력도 약하지만, 구성원들 간 유대감도 약한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배태될 수 있는 인식유형이라고 판단된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한국 ODA 정책에 대한 Q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인식유형은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인도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도주의적 목적의 원조를 중요시하며, 국익을 고려한 원조 반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인식유형은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형으로, 과거 한국이 받았던 원조에 대한 심리적 부채감을 가지고 있으며, 원조 시 원조수원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원조 확대보다는 국내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이 더 시급하다고 보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세 번째 인식유형은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 형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현실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개발원조에 대해 정치·경제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 유형은 개발원조에 쓰이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므로, 국가는 이를 사용함에 있어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유형은 또한 계층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네 번째 인식유형은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으로,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개발원조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문제 해결 및 국가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 번째 인식유형은 개인주의적 방관자 형으로, 국제 이슈 및 개발원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호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입장이다.

2. 정책적 제언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유형은, ODA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나타낸다. 이 인식유형은, ODA 원조 규모 확대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및 홍보,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대상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상 집단별로 전략적인 홍보, 교육 방법을 수립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 또는 사고의 준거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유형별로 개발원조 홍보 및 교육 정책이 전략적으로 초점 맞추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본다.

〈표 17〉 ODA 인식유형 정리

인식유형 특징	적극적 인도주의자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	소극적 인도주의자	개인주의적 방관자
ODA에 대한 관점	강한 인도주의적 시각	현실주의, 인도주의 혼재	자유주의적, 현실주의적 시각	현실주의, 인도주의 혼재	모호함
ODA 확대에 대한 견해	찬성	조건부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무관심
삶의 양식	평등주의	개인주의	계층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1)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에 대한 전략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의 경우, 개발원조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고 도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미 개발원조 확대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개인적으로도 민간단체 등을 통해 개발원조에 조금씩이나마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유형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부 주도의 시민 참여형 개발 원조 정책으로 유인

할 필요가 있다. 선진 공여국은 독일과 아일랜드의 예에서 보았듯이, 개발 원조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는 원조 정책 홍보 및 개발 교육 양쪽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국민들은 개발 원조 활동에 참여한 후 자신들의 경험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전파할 것이고, 이는 큰 정책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2)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에 대한 전략

소극적 인도주의자 형의 경우,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개발 원조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는 유형이다. 또한 국내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유형에 대해서는 개발 원조 활동의 필요성보다는 구체적인 원조 활동에 관한 정보를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방식 등을 통해 전달하여, 개발 원조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 원조에 관심은 있으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 및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국제협력 분야의 커리어 빌딩(career-building)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예비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 형에 대한 전략

국익추구형 현실주의자의 경우, 개발 원조를 함에 있어 정치적·경제적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므로 개발 원조 확대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OECD DAC 회원국 가입이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의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각 회원국들의 개발 원조 규모가 정기적으로 OECD peer review에 의해 OECD에 보고되고 전 세계 국가들에 의해 열람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결맞은 개발 원조 확대 및 국제적 약속 이행이 우리나라의 연성권력(soft power)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면 될 것이다.

(4)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 형에 대한 전략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자의 경우, 개발원조 자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견지에서 찬성하고, 과거 우리나라가 받았던 원조에 대해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벅찬 상황이므로 개발 원조 확대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 대해서는, 우선 수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의 틀을 닦는 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개발 원조 확대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확대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나아질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한다. 특히 본 유형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장차 취업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커리어 빌딩 위주의 정보 제공하고, 앞으로 이 분야가 유망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계획을 세워 발표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개인주의적 방관자 형에 대한 전략

개인주의적 방관자는 국제 이슈 및 개발 원조 관련 이슈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유형으로, 가장 까다로운 정책 대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우선 이 분야에 대해 무관심하므로, 인기 가수나 탤런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을 홍보 대사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유명인들이 제3세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제작·방영하면, 유명인의 행동과 가치관 등을 모방하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국제개발 분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미래의 유망 직종이나 취업 기회 확대 등 개인적 이익 분야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슈로 관심을 유도·지속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유형은 과거 한국이 받았던 원조에 대해 부채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방법론적으로 엄격하지 못했던 문제가 몇 군데 있었다. 우선, Q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한계가 있었다. 본래 Q 모집단은 문헌조사와 더불어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 하면서 진술문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권장되는 부분인데, 이 연구는 시간관계상 문헌조사만으로 Q 모집단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ODA에 대한 더욱 다양한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 Q 표본이 만들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문화이론적 관점이 반영된 Q 진술문이 ODA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Q 방법론에서는 Q 표본을 이루는 모든 Q 진술문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문화이론적 관점이 반영된 Q 진술문 역시 ODA와 연관성을 가진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적극적 인도주의자의 경우 소극적 인도주의자에 비해 평등주의적 성향이 약하게 나타나는 현상 등은 바로 이 한계로 인해 일어난 문제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ODA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Q 연구방법론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각 유형이 우리 국민들 중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인도주의자 형에 속하는 참여자가 10명으로 가장 많

았고, 개인주의적 방관자 형에 속하는 참여자가 2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실제 국민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각 인식유형에 대해 실제로 특화된 ODA 홍보 및 교육 전략을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민이 이러한 인식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탐색적 연구인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인식유형을 실제 정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으로 정한 집단에 대해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인식유형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ODA 홍보 및 교육 정책의 대상 집단이 세밀하게 구분된다면, 대상 집단별 전략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 정책 효과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 권을 · 박수경 · 이주영. 2011.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및 국제비교. ODA 정책연구 1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을 · 이주영 · 유애라. 2014.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김은미 · 김지영 · 이재은. 2011. 한국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전략. 한국 국제협력단.
- 김순은. 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도서출판 금정.
- 김흥규. 2009.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1 No.19
- 박복영 · 김형중. 2014. 20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경희대학교 산학 협력단.
- 박종민. 2002.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서울: 박영사,
- 윤지은. 2006. 한국의 해외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지지 제고 방안 연구: 정부, 언론, 개발 NGO를 중심으로. 제3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 외교부. 2008. 개발원조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방향 연구. KDS.
- 외교부. 2010. ODA 정책 및 홍보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인포마스터.
- 이상백. 2009.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교육현황과 과제. 국제개발협력3호: 120-131.
- 전승훈 · 유철 · 김익 · 이주현. 2008. 개발원조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방향 연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정정길 · 최종원 · 이시원 · 정준금 · 정광호. 201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하영선, 남궁곤.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KOICA. 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개정판)*. 도서출판 한울.

BMZ. (2008).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Strategies” 188. Berli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hong, A. and Gradstein, M. Who’s Afraid of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CESifo Working Paper No. 1833, 2006

European Commission. (2014). Special Eurobarometer 421 : “The European Year for Development – Citizen’s Views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Brussels: TNS.

McDonnell, I., Lecomte, H. and Wegimont, L. Public Opinion Research, Global Educ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form: In search of a virtuous circle. *OECD development center working paper* No.222, 2003

Noel, A., Therien, J. P. and Dallaire, S. Divided over Internationalism: The Canadian public and development assistance. *Cahiers du CPDS* No. 03-02

Nobuya Inagaki. Communicating the Impact of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World Bank Working paper No.120

Olsen, G. R. Public Opinion and Development Aid: Is There a Link? Centre for Development Research Paper 00.9, 2000

Otter, M., Domestic Public Support for Foreign Aid: Does it Matter? *Third World Quarterly*, Vol 24, No.1: 115-125, 2003

Paxton, P., and S. Knack. 2011. Individual and Country-level Factors Affecting Support for Foreign Aid.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3: 171-192.

www.odakorea.go.kr